

수산물 원산지 거래증빙자료의 비치·보관의무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Mandatory Record-keeping of
Transactions for Country of Origin Labeling

2019. 11.

임병호 | 기해경 | 백진화 | 박혜진 | 백준혁 | 강한애 | 이정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진	I	임병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 전문연구원 기해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 전문연구원 백진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박혜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백준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강한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이정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	----------	---

보고서 집필 내역	I	
연구책임자	I	임병호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3절

연구진	I	기해경 제2장 제1절 백진화 제2장 제2절 박혜진 제3장 백준혁 제4장 제1절 강한애 제4장 제2절 이정미 제5장
------------	----------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I	김봉태 부경대학교 교수 하소형 해양수산부 사무관
-----------------------	----------	-------------------------------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목차

❖ 요약 · i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6

제 2 장 국내외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 · 11

제1절 국내 원산지 관련 법 및 주요 내용	11
1. 원산지 규정	11
2. 원산지 표시제도	16
제2절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증빙제도	28
1. 축산물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제도	30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제도	38
제3절 해외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 및 분쟁 사례	52
1. 주요국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	52
2. 원산지 표시 분쟁 사례	64

제 3 장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 · 71

제1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운영 현황	71
----------------------------	----

	1.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활동 71
	2.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 76
	제2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문제점 78
	1. 수산물 거래명세서 등 발급 법적 근거의 부재 79
	2. 불투명한 수산물 유통구조 81
	3. 수산물 이력제 참여율 저조 82
	4. 음식점의 낮은 원산지 표시 이행률 84

제 4 장	수산물 원산지 거래증빙자료 비치·보관의무 도입방안 · 85
	제1절 수산물 원산지 거래증빙자료 비치·보관의무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85
	1. 조사개요 86
	2. 조사결과 87
	제2절 수산물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의무 도입방안 98
	1. 도입방향 98
	2. 추진방안 100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 111
	1. 요약 및 결론 111
	2. 정책 시사점 115

❖	참고문헌 · 121
----------	-------------------

❖	부록 · 127
----------	-----------------

표 목차

〈표 1-1〉 선행연구	7
〈표 2-1〉 특허 및 비특허 원산지 규정	15
〈표 2-2〉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제도	16
〈표 2-3〉 대외무역법 원산지 표시 조항	17
〈표 2-4〉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19
〈표 2-5〉 원산지 표시 판정 기준	20
〈표 2-6〉 관세법 원산지 표시 조항	22
〈표 2-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연혁	23
〈표 2-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4
〈표 2-9〉 수산물 원산지 표시기준	25
〈표 2-10〉 수산물 유통단계별 관련 조항	26
〈표 2-11〉 유통판매자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27
〈표 2-12〉 음식점 등 운영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27
〈표 2-1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28
〈표 2-14〉 농수축산물 거래증빙자료 발급법령	29
〈표 2-15〉 축산물 거래명세서 등 발급의무자 및 발급대상	35
〈표 2-16〉 축산물 이력제 연혁	36
〈표 2-17〉 축산물 이력법상 이력관리 대상축산물	36
〈표 2-18〉 축산물 이력법상 이력관리 발급대상	37
〈표 2-1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력관리 관련조항	43
〈표 2-2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력관리 관련조항	46
〈표 2-2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장)	48
〈표 2-22〉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대상 농수산물	49
〈표 2-23〉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 이력제 비교	51

〈표 2-2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산물 ...	51
〈표 2-25〉 미국 원산지 표시제도	52
〈표 2-26〉 식품표시법 개정 전후 비교	56
〈표 2-27〉 식품표시법 거래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	57
〈표 2-28〉 회원국별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현황	60
〈표 2-29〉 주요국 원산지 표시제도	63
〈표 2-30〉 US COOL 제도 개요	64
〈표 2-31〉 US-COOL 제도 육류 원산지 표시 방법	65
〈표 3-1〉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정원 현황	73
〈표 3-2〉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수	73
〈표 3-3〉 수산물 음식점 등 업소 수	74
〈표 3-4〉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현황	75
〈표 3-5〉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단속 실적(2017)	76
〈표 3-6〉 원산지 표시 이행률과 표시율	77
〈표 3-7〉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과 표시율 현황	77
〈표 3-8〉 업체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 추이	78
〈표 3-9〉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참여비중	83
〈표 4-1〉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 의무도입에 관한 인식조사 대상	87
〈표 4-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97
〈표 4-3〉 식육판매업 영업의 종류와 범위	103
〈표 4-4〉 거래증빙자료 의무발급·보관대상	105
〈표 4-5〉 축산물 관련 법령상 관리대상	106

그림 목차

◆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5
〈그림 2-1〉 쇠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32
〈그림 2-2〉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33
〈그림 2-3〉 배추 유통단계별 비용 및 가격	38
〈그림 2-4〉 연근해산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	39
〈그림 2-5〉 양식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활어 중심)	40
〈그림 2-6〉 원양(수입)산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	40
〈그림 2-7〉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4
〈그림 2-8〉 수산물 이력제 추진체계	45
〈그림 2-9〉 이력추적관리 수산물의 표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47
〈그림 2-10〉 58개의 구 표시기준을 식품표시법에 근거한 식품표시기준 1개로 통합	55
〈그림 3-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단속절차	72
〈그림 4-1〉 거래증빙자료 발급·보관의무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88
〈그림 4-2〉 박스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	90
〈그림 4-3〉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	91
〈그림 4-4〉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 보관의무 도입방향	99
〈그림 4-5〉 거래증빙자료 비치·보관의무 도입 추진방안	101
〈그림 4-6〉 수산물 거래 시 사용되는 저울	108

수산물 원산지 거래증빙자료의 비치·보관의무 도입방안 연구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식 비중이 증가하면서, 농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단속 효율화를 위한 거래 증빙자료 발급·보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의 준수와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 증빙자료가 적절히 비치·보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령의 미비 및 관련 업계의 인식 부족 등 원산지 표시의 투명한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축산물의 대표 품목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은 농가에서부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 업체, 소매업체(마트, 정육점, 일반음식점, 백화점 등)를 거쳐 최종소비자로 전달되어, 유통단계의 구분이 명확하고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산물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발급 의무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거래명세서 발급의무의 부과가 가능하고, 거래명세서 발급 및 보관의무와 함께 이력추적 관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원산지 표시의 증빙을 확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축산물과 달리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 있으며, 거래 명세서등 발급의무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등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의무 부과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산물 이력관리제도 역시 축산물처럼 의무 이력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이력제도를 활용한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 및 보관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경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제도는 EU 일부 회원국에서 운영 중이며,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일본의 경우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의 보관을 권고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국제분쟁인 미국·캐나다의 US-COOL(US Country of Origin Labeling) 사례 분석에서는 수입물품을 내국물품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국민대우 조항과, 원산지 표시제도의 도입이 불필요하게 무역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WTO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 횟수와 업소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이행률과 표시율도 2018년 기준 각각 91.1%, 98.2%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식점과 노점상의 원산지 표시 이행률은 83.2%, 68.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문제점으로 원산지 거래 증빙자료를 발급·보관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부재, 불투명한 수산물 유통구조, 활성화되지 못한 수산물 이력제, 음식점과 노점상 등의 낮은 원산지 표시 이행률과 표시율을 제시하였다.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 발급·보관의무 도입에 선행하여 수산물 업계의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음식점 등 운영자 다수는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고 있으나 거래 증빙자료의 보관의무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산물 매입시 거래명세서를 수취하는 대신 장부기록 후 일괄 정산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원산지 표시의 근거로 수산물 매입시 박스 등 현품에 표기된 원산지 표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관행 속에서 음식점 등 운영자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의 보관이 번거롭고 관리비용의 상승을 유발하므로 의무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거래 증빙자료 발급·보관의무 도입 및 이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수산물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무 부과 대상자를 특정하는 법령의 도입과, 의무 보관 대상 수산물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향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 대체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대체방안으로는 수산물 이력제의 활성화가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일부 품목에 한하여 수산물 이력제가 의무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경과에 따라 원산지 표시 제도 역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래 증빙자료 의무도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민관 지원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민간부문에 대한 거래 증빙자료 전산화 지원은 전산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신속한 단속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정부부문에 대한 지원책 마련으로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와,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단속비용 상향 등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 행정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거래 증빙자료 발급 의무 도입을 위한 후속 단계로서 ‘수산물 품목별 도입 타당성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도 향상을 위하여 수산물의 위생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원산지 표시는 WTO 및 FTA와 같은 국제법과의 정합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도입되어야 향후 분쟁발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배경 및 관련 법령

-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농수산물 먹거리 위생에 대한 우려 등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농수산물 안전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3명 중 1명은 하루 한 번 이상 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거 미국 광우병 사태와 최근 한·일 수산물 분쟁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이슈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원산지 표시는 비특혜 원산지 제도의 하나이며, 관련 법령으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대외무역법」은 수출입하는 자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이며,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도 적용함
 - 「관세법」은 통관 단계 물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과 함께,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에서 수입 유통이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기본법으로, 음식점 등 운영자는 농축산물 8개, 수산물 12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음

-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메뉴판 등에 표시해야 하고, 거래 증빙자료를 6개월 간 비치·보관해야 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점 등 운영자는 원산지에 대한 거래 증빙자료를 6개월 간 구비해야 함
 - 음식점 등 운영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함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증빙제도의 비교

- 축산물은 유통구조가 투명하고, 거래 증빙자료 발급 의무자가 명확하여 음식점 등 운영자의 보관의무 이행이 충분히 가능
 -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유통단계는 단순하고 대부분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거쳐 각 유통당사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식육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 거래명세서 발급의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력관리번호의 발급 의무자와 발급 대상자를 규정하여 원산지 확인이 가능함
- 그러나 수산물은 유통구조가 불투명하고, 관련 법령에 거래 명세서 등 발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 양식 수산물의 산지 위판장 판매비중은 40% 수준이며, 도매단계의 당사자가 다양하여 유통단계가 복잡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축산물과 달리 수산물 거래시에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발급의무 규정이 없으며, 수산물 이력제 역시 선택적으로 운영 중임

■ 다만 수입유통 이력관리대상에 한하여 수입시부터 의무적으로 이력 번호를 신고하도록 규정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입 농산물 14개, 수입 수산물 17개 품목 유통이력을 의무적으로 기록하여야 함
- 또한 유통이력을 증빙하기 위한 장부 및 관련 거래명세서 등을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할 의무 존재
- 수입유통 이력관리대상 수산물 중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도 일부 포함됨(예: 뱀장어, 미꾸라지, 참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대상수산물	관세법 수입유통 이력관리대상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 수족관 보관 살아 있는 수산물 (가공품 포함): 12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냉장홍어, 활우렁쉥이, 활머장어, 활방어: 17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유통이력대상에 포함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예: 뱀장어, 미꾸라지, 참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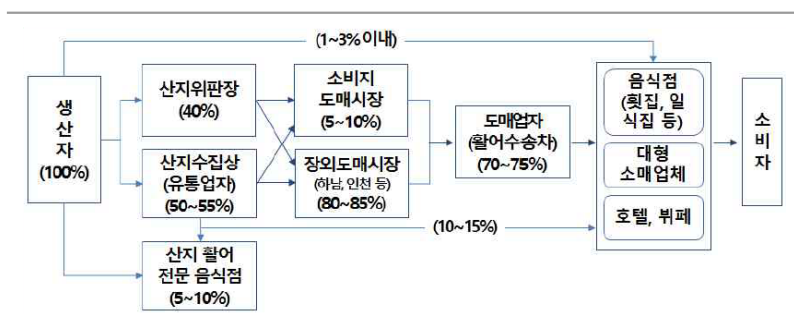
■ 수산물 거래명세서등 발급의 법적 근거 부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원산지 표시 증빙자료로 다른 법령에 따른 거래명세서 등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러나 수산물은 관련 법령에서 원산지 표시 증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 발급의무가 없어, 보관 의무 역시 이행될 수 없음

- 발급의무의 부재로 인한 문제로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직접 근거가 없어 거짓 표시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

■ 불투명한 수산물 유통구조

- 축산물과 달리 수산물은 단일화된 유통창구가 존재하지 않는 등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불투명함
- 양식 수산물은 유통과정 도소매업자들의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하고 중복적이라서, 거래 명세서 등 발급 당사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곤란



■ 수산물 이력제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이행률의 저조

- 수산물 이력번호에는 원산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거래 증빙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나, 아직까지 수산물 이력제 참여업체 비중은 높지 않은 상황
- 음식점과 노점상은 원산지 이행률과 표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유통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여 증빙자료가 제대로 발급·보관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의무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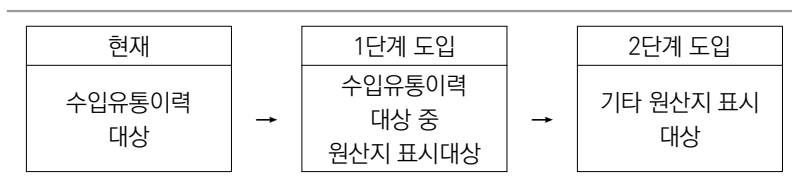
- 음식점 등 업계는 현실적으로 장부거래를 주로 이용하므로 의무도입 시 거래 증빙서류의 보관 및 관리에 비용 발생함
 - 수산물 음식점등 운영자는 매입 시 박스에 표시된 원산지를 메뉴판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는 관행이 많음
 - 이에 거래 증빙자료 보관의무 도입 시 보관 및 관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 증빙자료 의무도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유통업계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등의 긍정적 인식과 함께, 재고관리 비용의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저하 등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음
 - 기존 관세법 준수업체 또는 전산화된 수입업체는 거래 증빙자료의 의무도입에도 별도의 추가부담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소규모 영세기업 또는 재래시장 등에서는 재고관리 비용 및 생산단가 증가 등으로 수산물 가격경쟁력 저하를 우려함
- 정책당국은 보관의무의 도입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 효율성 증가가 예상되지만, 자율적인 발급·보관을 위한 대체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 보관의무 도입은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거래 증빙자료의 보관이 아니더라도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 확인이 가능한 대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수입 농수산물인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입유통이력제' 또는 향후 수산물 유통이력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음

수산물 원산지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의무제 도입 방안

■ 수산물 유통구조를 반영한 법령의 마련

- 일방적인 의무의 부과만이 원산지 표시 단속 효율화 방안은 아니며, 가능한 한 이러한 의무의 부과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함
- 현재 수산물 유통단계에 있는 영업자들의 영업의 범위와 종류 등을 명확히 하여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 의무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거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수산물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유통판매업자가 거래 명세서의 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령을 개정 및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원산지 표시 대체방안(수산물 이력제 등)의 활성화

- 현재 굴비와 생굴에 한하여 수산물 이력제가 시범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어 동 사업의 경과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 역시 활성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됨

- 또한 수입수산물에 적용되는 수입 이력관리 제도는 현재 의무적으로 이행되고 있어,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 특히, 2020년부터 수산물 수입 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각 당국에서 관할하는 두 개 법령의 효율적 집행이 예상됨

■ 효율적 이행을 위한 민관 지원체계의 구축

- 원산지 표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금이 부족한 영세기업 또는 재래시장 자영업자에게 거래 증빙자료 전산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함
- 거래 증빙자료의 확인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량의 증가 및 원산지 표시 단속 비율 증가 예정에 따라 단속 행정인력의 보강 필요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인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식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3명 중 1명은 하루에 한번 이상 밖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pp. 8.)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거 광우병 사태, 그리고 최근 한-일 수산물 분쟁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이슈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먹거리 농수산물이라 할 수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수산물 등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수산물을 판매할 때 생산된 지역 또는 국가를 알려주는 제도가 원산지 표시제도다. 우리나라는 통관 시 수입되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

하여 원산지 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국내유통 단계에서도 통관 시 신고한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음식점과 같이 당초 수입한 물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료로 사용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기하여, 해당 음식물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통하여 정부는 건강,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농수산물은 국민의 먹거리로서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 제조물품보다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요구된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빙을 해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특정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한다.¹⁾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영업자 및 판매업자 등은 물품 거래 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관련 법령에는 거래명세서 등의 발급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 단속기관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시 원산지 표시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투명한 이행과 수산물 원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증빙 자료의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수산물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관세법」에 근거하고 있어, 동 법률에 근거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수산물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수산물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제도 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 수산물 법령뿐 아니라, 관련 규정 및 외국의 유사 제도 분석, 그리고 원활한 이행을 위한 수산물 관련 업계의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크게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과 이행 현황, 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당사자들이 속한 수산물 업계를 연구 범위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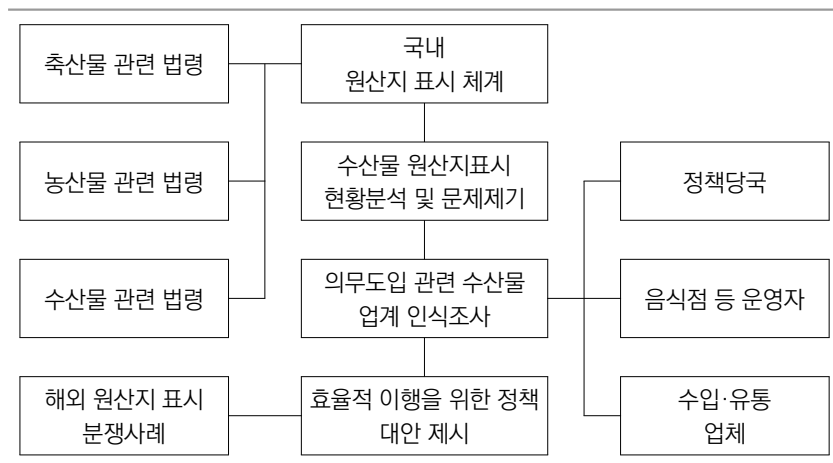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주체는 수산물을 수입·생산·거래 및 판매하는 당사자들이며, 이들은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개별 법령 및 식품 관련 법령도 포함

된다. 또한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의 현 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단속 현황 및 그동안의 위반 단속 실적 성과분석도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외국 원산지 표시 법령과의 비교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미국, 일본, EU 등 원산지 표시 분야에서 비교대상이라 할 수 있는 국가들의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도 연구대상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의 개정이 우리나라 수산업계에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킬지, 그리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수산업계 종사자와 관련 정책당국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원산지 표시 의무는 정부의 규제사항에 해당되므로, 법령 및 관련 규정의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관련 농수축산물 법령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법령과 비교대상이라 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국내 유통 축산물뿐 아니라, 수입산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관리에 대한 규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동 법규를 모델로 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까지의 원산지 표시 단속 현황 및 성과분석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의 발간자료를 분석하였다. 국내 법령과 더불어 외국 문헌연구를 위하여 해당국 홈페이지를 방문, 현행 법령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자료: 저자 작성

인식조사는 크게 전화설문 및 면접 인터뷰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전화설문은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수행하였는데, 특히 과거 원산지 미표기 업소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에 관한 인터뷰를 시도하는 것은 인터뷰 거절 가능성이 높아, 연락처 확보가 가능한 업소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면접 인터뷰는 수입·유통업체 및 정책당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수입자는 전화를 통하여 인터뷰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정책당국의 경우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을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이유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을 수 없는 구체적인 의견을 얻고자 함이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증빙서류 보관에 대한 법령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현재까지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정재완(2010, pp. 385-386.)은 원산지 표시위반 감소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수입통관 이후 국내 유통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대상 및 유통이력관리 대상물품의 선정·단속과, 유통관리, 위반물품 책임강화, 단속 전담조직 설치, 운영과 같은 정부규제 중심의 대응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최임수(2011, pp. 283-289.)는 원산지 표시위반의 억제와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로서, 표시위반에 따른 제재내용과 표시위반 현황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억제방안으로서 표시위반에 따른 처벌강화, 단속활동 강화, 단속정보 공개, 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정부의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는 업체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고민영(2012, pp.187-188.)은 미국 원산지 표시제도를 국제통상법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미국 원산지 표시가 WTO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위반으로 제소된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제도 개정이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다.

강종호·김대영(2013, pp. 6.)은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환경에 따라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하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6년 3월에 수산물의 유통체계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농림수산물식품부(2012, pp. 74.)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후생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당시 원산지 표시 대상 12개 품목과 관련하여 표시 관련 비용이 17,842억 원, 사회적 후생 증가분이 최대 50,222억 원으로, 순 후생 증가분은 최대 32,380억 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동 연구는 원산지 표시가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므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점진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황화중(2018, pp. 54-57.)도 원산지 표시 위반벌칙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의 벌칙조항을 비교하고 이를 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최임수(2011, pp. 283-289.), 정재완(2010, pp. 385-386.)과 마찬가지로 황화중(2018, pp. 54-57.)의 연구 역시 원산지 표시 위반의 원인을 정부의 규제적 관점에서 찾고, 이를 강화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위반을 해결하고자 한 점에서 기존 연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 선행연구

주요 선행연구	주요 내용
정재완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과제명: 원산지 표시 위반 수입물품의 시중유통 근절방안 연구목적: 수입통관 이후 원산지 표시위반 수입물품 단속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 단속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함 원산지 표시 대상 및 유통이력관리대상 물품의 합리적 선정 필요 수입통관물품의 유통관리과정 강화, 위반물품 책임강화, 단속 전담조직 운영

주요 선행연구	주요 내용
최임수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과제명: 원산지 표시위반 효과적 억제방안 연구 연구목적: 원산지 표시위반행위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발을 위한 방안 강구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과 표시위반 현황 분석 주요 억제방안으로서 ① 처벌의 강화 및 적발확률 제고, ② 단속활동의 강화와 단속요원의 확충, ③ 단속정보의 공개, ④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및 원산지 표시제도의 홍보와 교육 등 제시
고민영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과제명: 육류상품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조치를 둘러싼 국제 통상법적 쟁점 연구목적: US-COOL 사건 분석을 통하여 TBT 협정 제2.1조와 제2.2조의 해석지침 제시 미국 원산지 표시제도(US-COOL) 개요 및 WTO 주요 쟁점사항 분석 미국 원산지 표시제도는 캐나다 및 멕시코산 수입쇠고기 관리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 TBT 협정 제2.1조(내국민대우)를 위반하였다고 판결(상소기구) 이에 미국정부는 US-COOL제도 대상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삭제(적용취소)
강중호, 김대영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과제명: 수산물 유통 관련법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목적: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산물 유통 개선을 위해 제 법률을 진단하고, 새로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여건과 환경변화 분석 농안법과 수산물 유통 관련 법에 대하여 제·개정 과정과 시사점 검토 관련 국외 사례 검토: 일본 도매시장법
농림수산 식품부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과제명: 음식점 원산지 표시 성과분석 및 중장기적인 대상품목 확대방안 연구 연구목적: 우리나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발전방안 제시 우리나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현황과 원산지 표시효과의 계량적 분석 해외 음식점 원산지 표시사례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확대 등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제도의 발전방안 제시
황화중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과제명: 원산지 표시 위반 벌칙의 합리적 조화방안 연구 연구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간의 제재조치에 대한 법률체계를 살펴보고 양 법 간 합리적 조화방안을 모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에서 관세청을 제외하는 법안의 개정 및 배경사항 원산지 표시 단속 소관부처 및 관련 법령관계 분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과태료, 벌칙 비교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첫째, 원산지 표시 연구대상을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최종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자로 선정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수입 및 유통단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이들 단계 종사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위반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이는 결국 최종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최종 소비자라는 중요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최종소비자에게 올바른 원산지 표시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 이행 관련 법 규정 등에서 문제점을 찾고자 하였다.

둘째, 정부의 규제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업계 관점에서 원산지 표시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하는 주체는 정부이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서 정부의 적절한 규제 행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규제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된다는 것은 현재 법령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특히 원산지 표시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단속 공무원의 수를 늘려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자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위해서는 업계가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수단이 무엇인지 업계의 입장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직 유통업계와 일반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하고 심층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업계에 적용 가능한 원산지 표시 이행법령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셋째, 원산지 표시제도 법령 개정이 국제법적 시각에서 향후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본래 국제법인 WTO 원산지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내국법령에 입법화한 것이다. 즉, 원산지의 내재적 속성상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에 무역제한적인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WTO 제3조 내국민대우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 판례들을 살펴보면, 원산지 표시제도를 이용하여 수입산 물품의 수입을 제한한 바 있으며, 이는 WTO 제소 대상이 되어 해당 조치는 무효화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법 개정 이전에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여, 원산지 표시제도의 개정이 향후 WTO 분쟁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국내외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

제1절 국내 원산지 관련 법 및 주요 내용

1. 원산지 규정

1) 원산지 규정의 개념

원산지란 어떤 물품이 성장·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으로서 한 국산, 미국산 등과 같이 하나의 국가명으로 표현된다.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에서는 원산지를 ‘관세 부과, 수량 제한 또는 기타 무역 관련 조치의 목적을 위한 규정에 따라, 생산·제조(produced or manufactured)된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²⁾ 물품의 원산지는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한 기준에 따라 오직 하나의 국가명을 부여받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다.

2) Customs Cooperation Council(1973)

원산지 규정은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과 같은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특혜 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원산지 표시와 같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성격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법령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단지 사용목적에 따라 위와 같이 명명할 따름이다. 예를 들어, 물품의 수출입에 적용되는 관세법은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특혜’ 또는 ‘비특혜’와 같은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특혜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함에 따라 특혜(일반적으로 관세의 인하·철폐)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다. 우리나라가 2004년 한-칠레 FTA 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특혜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개발도상국에 일방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관세 공여규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 Pacific Trade Agreement) 역시 관세의 특혜부여를 위한 법령에 포함된다. 최근 2019년 11월 협상이 타결된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와 일본 및 환태평양 국가가 중심이 된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각 회원국의 특혜인정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 가능한 특혜 원산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특혜 원산지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산지 규정을 의미한다.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목적은 다양한데, 해당 목적에 따라 법령을 달리하고 있어, 원산지 관련 법령이 다수 존재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원산지 표시를 규

정하는 「대외무역법」, 특정국 물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관세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규정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비특혜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특혜 원산지 규정과 다른 점은 특혜 원산지 규정 관련 법령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시스템에서 운영되지만,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한 법령은 각 국가가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행한다는 점이다. 특혜 원산지 규정은 ‘관세’를 중심으로 합의한 국가 간 협정(Agreement)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국가 및 제3국의 국가들도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법체제도 양국 간 통일되어 있다. 반면, ‘원산지 표시’ 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원산지’ 등 비특혜 원산지는 WTO에서 통일원산지 규정을 타결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일부 회원 국가들의 합의 도출 실패로 현재까지 합의되지 못하였다. 이에, 각 국가들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특혜 원산지관련 법령에 비하여 일관적이지 못하고, 다수의 법령에 걸쳐 분산 규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³⁾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규정의 기본골격은 개정교토협약의 부속서 K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64년 「관세법 시행령」에 원산지 규정을 최초로 국내법화 하였다. 동 법령 제1조(원산지증명서)에 협정관세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를 두어 최초로 특혜 원산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 관리제도를 마련하였다. 반면 원산지 표시제도는 1991년 「대외무역법」에 도입되면서, 기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양쪽에 모두

3)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무역전쟁은 상호 관세부과를 수단으로 하여 심화되어 왔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물품을 가려내기 위하여 미국은 자국법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규정되게 되었는데, 원산지 판정기준, 표시대상 물품, 벌칙 등은 「대외무역법령」에 두면서 이와 관련하여 수입 통관 시 준수 의무 등은 「관세법」에 규정하여 양쪽에 법률적 근거를 두게 되었다.

우리나라 특혜 원산지 규정은 「관세법」, 「FTA 특례법」 등 다양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FTA 와 같은 국제법을 국회 비준과정을 거쳐 국내법화 한 것이다. 2019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FTA는 발효 16개, 서명/타결 3개(영국, 이스라엘, 인도네시아)로 총 19개 국가(경제권)와 FTA를 맺고 있다. 그러나 모든 FTA 협정문이 개별 법령을 가지지 않고, 국내법인 「FTA 특례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모두 수용, 단일 법령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 외의 특례에 관한 국제법인 WTO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 협정(APTA), 기타 개도국 간 협정은 관세법과 기타 관련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혜 원산지 규정이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과 달리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국제법이 아직 타결되지 않아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국내법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은 1994년 WTO 체결 당시부터 회원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일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이해당사국 간의 합의에 실패하여 현재까지 미결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을 기본으로 하여 통관 단계 시 준수사항을 「관세법」에 규정하고, 농수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 의무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비특혜 원산지의 대상품목과 원산지 판정기준, 표시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이 「대외무역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덤핑방지 관세 및 상계관세, 긴급관세 등 관세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은 「관세

법」에 규정되어 있다. 「농수산물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입 및 국내 유통단계에 있는 농수산물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외 나머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외무역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2-1〉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규정

구분	국제법	국내법
특혜 원산지 규정	• 자유무역협정(FTA)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특례법)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WTO • WTO 개도국간 협정(TNDC) • UN 개도국간 협정(GSTP)	• 관세법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비특혜 원산지 규정	•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 WCO 교토협약(부속서 K)	• 관세법 • 대외무역법 • 농수산물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식품위생법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2018) pp. 9

2. 원산지 표시제도

원산지 표시는 비특혜 원산지 제도의 하나로서 대표적인 관련 법령으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있다. 우선, 원산지 표시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표시의 방법과 원산지 판정기준 등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물품의 통관 시에는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데 「관세법」에서 원산지 표시물품의 확인, 보완 그리고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이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반면, 농수산물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두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과 영수증 보관, 위반자 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각 법령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2-2〉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제도

법령	대외무역법	관세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기획재정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주요 대상	수출입물품	수출입물품	농수산물
특징	원산지 표시에 관한 기본법, 원산지의 표시방법, 판정기준 등 상세규정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표시여부 적정성 확인, 보완, 보세구역 반입명령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우선 적용, 급식소, 음식점 적용규정

자료: 저자 작성

1)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수출입하는 자의 물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의 대상, 위반 시 조치, 원산지 판정기준 등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포괄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원산지 표시의 적용 대상을 ‘수출입하는 자’로 하고 있어 수입된 물품이 국내 유통되는 경우에도 「대외무역법」이 적용되는데,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도 「대외무역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수출물품의 경우 수입상대국에서 원산지 표시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대외무역법」이 아닌 상대국 법령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표 2-3〉 대외무역법 원산지 표시 조항

조항	주요 내용
제33조(수출입 물 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규정 • 원산지 허위, 오인, 손상, 변경, 미표시 금지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
제36조(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에게 물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제37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납부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변조 금지 • 외국산 물품의 국산물품 가장 및 수출 판매 금지

자료: 저자 작성

원산지 표시대상 수출입물품의 범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로 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제1류부터 제96류까지 HS4단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에 해당하는 제3류는 제0301호, 제

0302호, 제0303호, 제0304호, 제0305호, 제0306호, 제0307호, 제0308호로 모든 수산물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대외무역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보조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된 물품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해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이 적절한 표시방법이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정명령 또는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반자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보다 상세히 정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산지 표시인 ‘Made in 국명’이 일반적이지만, 이 외에도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몇 가지 원산지 표시원칙을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하는 등, 국가명은 아니지만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명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 단, 이러한 경우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것에 한정되므로 이 외의 표기방식은 사용될 수 없다.

4) 이 외에도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도 사용이 가능하다.

〈표 2-4〉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항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자료: 대외무역관리규정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국내산’으로 표기하면 되지만, 그 외의 수입물품은 국가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먼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를 원산지 판정이라 한다. 원산지 판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을 채취, 생산, 제조, 가공한 국가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제교역하에서는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두어, 그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완전생산기준, 둘째, 실질적 변형기준, 셋째, 단순가공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생산기준은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생산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기준으로, 원산지 본래의 의미에 가장 근접한 개념의 원산지 판정기준이다. 특히 농수축산물 중 가공하지 않은 품목들이 동 기준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받게 된다. 두 번째 기준인 실질적 변형기준은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로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

산지로 하는 기준이다. 제조업 생산품에 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세 부적으로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 세 번째, 단순한 가공활동을 제외하는 규정의 의미는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한 예외로서, 최종적으로 공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가공활동만으로는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표 2-5〉 원산지 표시 판정 기준

원산지판정	세부기준(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완전생산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실질적 변형기준	<p>일반물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 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 <p>별도 물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 주요 부품, 주요 공정기준 등
단순가공의 금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4. 통풍, 건조, 냉동, 냉장 등 단순한 가공활동 등(8항5호)

자료: 대외무역관리규정

수입된 물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한다면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지위는 바뀔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5조(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 원산지 판정기준)에서 별도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근거로서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는데 이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에 관해서도 각각 「대외무역법」 제36조(수입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제37조(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제3국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을 적절히 단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세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외무역법」 제38조(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 물품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에서 단속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동 규정의 적용을 통하여 제3국 원산지 물품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기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우리나라 수출입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2) 관세법

「관세법」은 특혜 원산지에 관한 규정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일부 조항에서 비특혜인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절히 원산지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관단계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이에 관한 사항을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조항으로는 원산지 표시가 허위·오인표시 등 부적절하게 표시된 경우 이를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하게 된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경우 이를 보완·정정하여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는 우리나라를

경유, 환적하는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에 대하여 유치(留置)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브랜드와 동종 물품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은 위반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경우 유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원산지 수정 및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어, 허위표시 물품에 대한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된다.

「관세법」 제232조의3(원산지확인위원회)에서는 쟁점이 되는 원산지 및 원산지 표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원산지확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의대상은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원산지와 관련된 사안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제233조의3(원산지 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에서는 원산지 표시위반단속을 위한 각 정부 부처 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표 2-6〉 관세법 원산지 표시 조항

조항	주요 내용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통관 불허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우리나라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환적물품을 유치하도록 규정
제232조의3(원산지확인위원회)	• 원산지 표시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원산지확인위원회 근거
제233조의3(원산지 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 원산지 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설치 근거

자료: 관세법

「관세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관련 조항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많은 편은 아니나, 원산지 표시가 국가 간의 이동 등 국경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경에서의

원산지 표시가 국내에서도 적절히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관세청장)」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동 고시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정보가 포함된 유통이력을 국내 거래 시마다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내에서의 원산지 관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국내산 및 수입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는 법규이다. 2010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법령에 흩어져 있던 조항들을 단일 법령으로 통합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012년에는 음식점에서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총 12개의 원산지 표시 수산물을 규정하고 있다.

〈표 2-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연혁

일시	주요 내용
2010. 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분산된 원산지 표시제 일원화)
2012. 1	대규모 점포 개설자 원산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2012. 4	음식점 수산물 표시대상 신설(6개 품목)
2015. 6	과징금제도 도입(거짓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위반자,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2016. 2	음식점 원산지 표시강화(16개→20개 품목 확대)

자료: 농업교육포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바로알기

크게 총칙, 원산지 표시, 보칙, 벌칙의 4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비교적 적은 조항을 가지고 있는 법률로서 주요 사항은 제2장 원산지 표시에 포함하고 있다.

〈표 2-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조항	주요 내용
제5조(원산지 표시)	• 원산지 표시대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 원산지 거짓표시, 손상·변경 표시의 금지
제6조의2(과징금)	•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위반금액의 5배)을 부과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공무원의 조사권한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의무 규정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거래금지, 관련사항의 공표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 원산지 표시 위반자의 표시제도 교육의무
제10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 방사성 물질 유출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정보 공개 노력(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자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기준은 국산, 원양산, 수입산 그리고 그 가공품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수산물은 국산과 원양산을 달리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산 수산물은 필요한 경우 보다 세부적으로 행정구역명까지 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입 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국가의 국가명 또는 'Made in China'와 같은 식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국산 및 수입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가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료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며, 동일한 원료의 다른 원산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2개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9〉 수산물 원산지 표시기준

품목	수산물 원산지 표시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단,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 시·도명, 시·군·구명 표시 가능
원양산 수산물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북빙양”으로 추가 표시 가능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가공품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한 경우,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표시

자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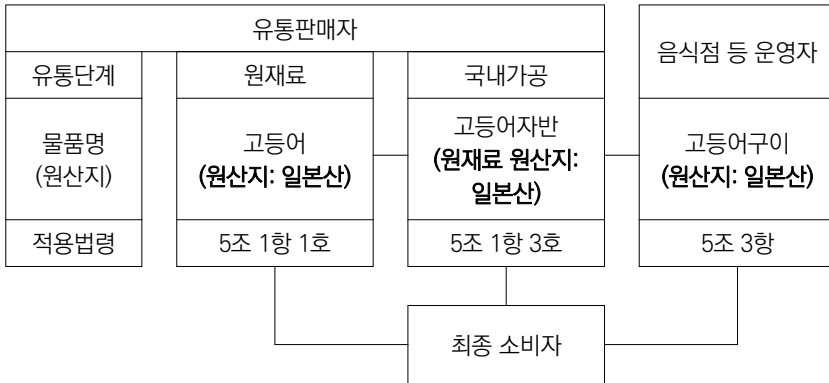
원산지 표시 대상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수입·국내유통·판매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와 음식점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의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증빙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이를 유통판매자와 음식점 등 운영자로 표기하고자 한다.

1. 농수산물과 가공품을 수입, 생산·가공하여 출하·판매하는 자, 판매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법 제5조 1항 1호, 2호, 3호)
→ 유통판매자
2.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법 제5조 3항 및 시행령 제4조)
→ 음식점 등 운영자

예를 들어, 수입자가 일본산 고등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판매하는 경우, 수산물 원재료 수입자는 법 제5조 1항 1호, 국내 가공

판매업자는 법 제5조 1항 3호, 그리고 음식점 등 운영자는 법 제5조 3항의 적용을 각각 받게 된다.

〈표 2-10〉 수산물 유통단계별 관련 조항



자료: 저자 작성

농수산물 유통판매자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표시대상은 국산농산물 222품목,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농산물 가공품 268품목,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192품목,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24품목, 수산물 가공품 66품목 등 다수의 품목이 포함된다. 표시대상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표시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데, 수입 농수산물의 경우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동 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표 2-11〉 유통판매자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구분	수입 및 국내유통단계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별표 1, 2)
농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농산물 222품목 •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 농산물 가공품 268품목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192품목 • 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24품목 • 수산물 가공품 66품목

자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이와 달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음식점 등 운영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은 일반적인 표시대상(법 제5조 1항)에 비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식점 등 운영자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은 크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2-12〉 음식점 등 운영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구분	음식점 등 운영자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5항)
농축산물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 가공품을 포함, 찹쌀, 현미 및 찰쌀을 포함) • 배추김치(배추김치 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 포함), 고춧가루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 가공품 포함)
수산물 (1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해당 수산가공품 포함) •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 있는 수산물

자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12종에서 15종(다랑어, 아귀, 주꾸미 추가)으로 확대 예정(2020년 4월)

동 조항에 적용되는 표시의무자인 음식점 등 운영자는 직접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바,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원산지를 알리는 자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및 관련증빙에 대하여 보다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비치의무가 그것인데, 음식점 등 운영자는 원산지 표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즉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이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를 표시할 때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6개월간 구비하게 하여,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단속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2-1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자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절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증빙제도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판정의 결과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기한 것이므로, 원산지 표시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에 대한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증빙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원활하고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은 품목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내산의 경우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정의된 품목이며, 수입산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HS 코드 기준으로 구분된다. 음식점 등의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과 원산지 표시증빙 관련 제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14〉 농수축산물 거래증빙자료 발급법령

구분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일반 거래	대상품목	축산물(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의 식육)	없음	없음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없음	없음
	발급의무	의무	선택	선택
이력 추적 관리	대상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소, 돼지)* •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 가축,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식용 돼지 축산물** - 수입산: 이력번호가 부여된 식용 수입쇠고기, 돼지고기 	농산물	수산물
	근거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급의무	의무	선택	선택***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 보관의무		의무(6개월)	없음	없음

자료: 저자 작성

주: * 이력관리대상 가축은 2020년 1월 1일 소, 돼지, 닭, 오리로 확대 시행 예정

**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은 2020년 1월 1일 돼지, 닭, 오리로 확대 시행 예정

*** 굴비, 생굴에 한하여 2021년 11월까지 이력관리 의무시범사업 실시 중

음식점 등은 판매 시 원산지 표시 증빙자료를 비치·보관해야 하며, 증빙자료 보관의무는 발급의무를 근거로 이행될 수 있다. 그러나 농수축산물 중 해당 증빙자료의 발급 및 보관 의무가 모두 명시된 법령은 축산물뿐이다. 축산물의 경우, 증빙자료의 발급 근거는 일반 거래하는 경우와 이력관리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일반 거래 시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이력관리제도 해당 품목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증빙자료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상기 법령을 근거로 할 수 있다. 반면, 농수산물 은 축산물처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강제하는 관련 법령이 없어, 영수증 및 거래 명세서의 보관 의무 역시 없는 상태이다.

다음 절에서는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증빙자료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서 각각 어떻게 증빙하는지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이력법」 등 농수산물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제도화가 정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축산물 원산지 표시증빙제도를 먼저 소개하고, 이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증빙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축산물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제도

축산물에 관한 원산지 표시의 거래증빙자료는 크게 일반 거래 시 발급되는 거래명세서 등과 이력관리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거래 시 발급되는 거래명세서 등은 모든 축산물 거래 시 적용되는 것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해야 한다. 이력관리 대상품목은 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품목(소, 돼지, 닭, 오리 및 이들의 축산물 등)으로서 「가축 및 축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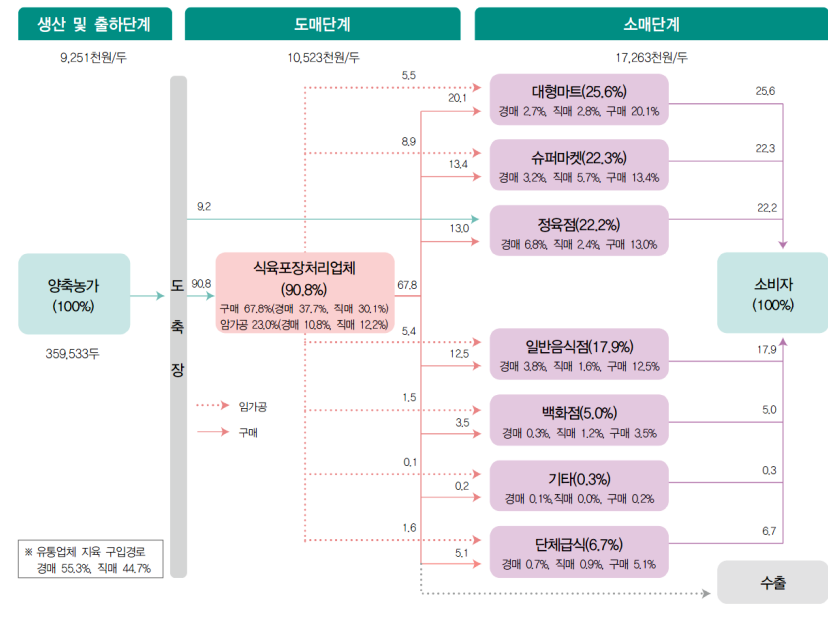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포함한 이력번호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는 품목을 말한다.

축산물 거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유통구조에 따라 발생하므로, 일반 거래증빙과 이력관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유통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축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중 대표품목인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축산물 유통구조

쇠고기 유통단계는 크게 생산 및 출하, 도매 그리고 소매단계로 구분된다. 농가에서 출하된 소는 도축장을 거치는데 이후 도매단계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체가 90.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직반출되는 비중은 9.2%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육포장처리업체로부터 소매단계가 구입하는 비중은 대형마트 20.1%, 슈퍼마켓 13.4%, 정육점 13.0%, 일반음식점 12.5% 순이며, 임가공은 슈퍼마켓 8.9%, 대형마트 5.5%, 일반음식점 5.4%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매단계는 다양하나 일반음식점은 양축농가와 도축장 그리고 식육포장처리업체를 거쳐 구매 또는 임가공하고 있어, 투명한 유통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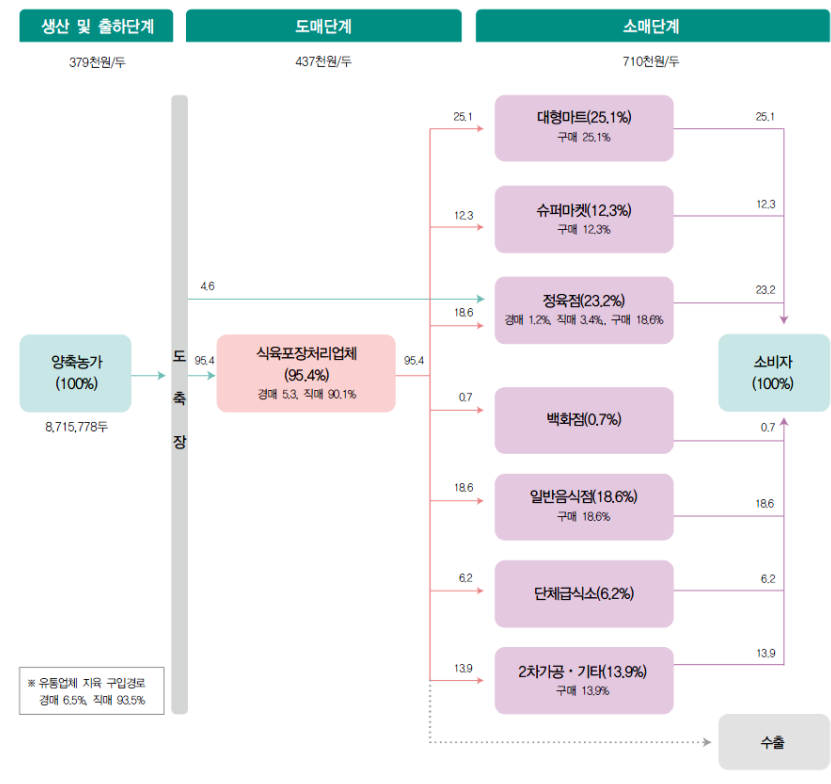
〈그림 2-1〉 쇠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2019)

돼지고기의 유통단계는 쇠고기와 유사하지만 보다 단순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및 출하, 도매 및 소매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가에서 도축장을 거쳐 식육포장처리업체를 거치는 비중이 95.4%, 도축장에서 직반출되는 비중은 4.6%이다. 식육포장처리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비중은 대형마트 25.1%, 정육점과 일반음식점 18.6%, 슈퍼마켓 12.3% 순으로 조사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 또는 수출된다. 쇠고기 유통단계와 마찬가지로 일반음식점은 양축농가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체를 거친 돼지고기를 구입함으로써, 구입한 돼지고기의 이력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2019)

2) 일반거래증빙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축산물 거래 시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증빙이 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데, 근거 조항이 되는 제3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10. 24.)

1. ~ 4. (생략)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식용란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된 거래명세서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5의2. ~ 6. (생략)

축산물 영업자의 거래명세서 발급의무는 2008년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44호)」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의무도입 시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축산물의 거래내역 작성,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다고 개정이유에 명시하였다.

원산지를 적은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서류를 발급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관의무를 규정하기에 앞서 각 유통업자와 판매업자의 발급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생산단계별로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원산지를 적은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및 별표에서는 법에서 정한 거래명세서 발급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도축업·집유법·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과,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원산지’를 적은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음식점 등 운영자는 자신들이 수취한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의 증빙을 할 수 있다.

〈표 2-15〉 축산물 거래명세서 등 발급의무자 및 발급대상

원산지 표시 거래명세서 등 발급의무자	거래명세서 등 발급대상
식육가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식육포장처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식육판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자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3) 이력관리제도

축산물 이력제는 유럽에서 발생한 소해면상뇌증⁵⁾을 계기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이나 수입부터 시작하여 국내의 판매 등 각 단계별로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역추적을 통하여 신속히 문제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위생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축산물 이력제의 이행을 위하여 발급되는 이력번호에는 물품의 원산지 정보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수입산 이력 축산물에는 신청인 정보와 원산지, 수입

5)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광우병이라고도 불린다.

업자, 유통경로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원산지 표시를 위한 단순 증빙자료 이상의 가치가 존재한다. 반면,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은 소, 돼지, 닭, 오리와 계란에 한정되어 있어 원산지 표시대상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거래명세서 발급대상과 차이가 존재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축산물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하여 2008년 12월 제정되었다.⁶⁾

〈표 2-16〉 축산물 이력제 연혁

'04. 10.	• 소 및 쇠고기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08. 12. 22.	• 소 사육단계('09. 6. 22. 쇠고기 유통단계 전면 시행)
'10. 12. 22.	• 수입 쇠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12. 10.	• 돼지고기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14. 12. 28.	•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시행
'18. 12. 28.	•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시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검색일: 2019. 10. 29)

「축산물 이력법」에서 이력관리 대상 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하며,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은 다음과 같다.

〈표 2-17〉 축산물 이력법상 이력관리 대상축산물

국내산 이력축산물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처리하여 얻는 축산물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
수입산 이력축산물	이력번호가 부여된 쇠고기나 수입돼지고기

자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6)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 1일 시행예정 법령을 기준으로 설명

국내산 이력축산물은 사육단계와 도축단계에 관한 이력관리를 적용받으며, 수입산 이력축산물은 수입단계의 이력관리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유통·판매단계의 이력관리를 적용받게 되고, 이때 축산물을 유통하는 자는 음식점 등 운영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할 경우, 거래명세서 등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력번호는 원산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 서류를 이용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이력번호 발급자와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2-18〉 축산물 이력법상 이력관리 발급대상

이력번호 발급의무자 (축산물 이력법 제18조3항)	이력번호 발급대상(축산물 이력법 시행규칙 제20조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판매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자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육포장처리업자 2. 식육판매업자 3.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5.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7.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 9. 이력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자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물 이력법」에 따라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발급하는 거래명세서 등과 같은 서류를 발급하면 된다. 즉 식육의 종류, 원산지와 등급 및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한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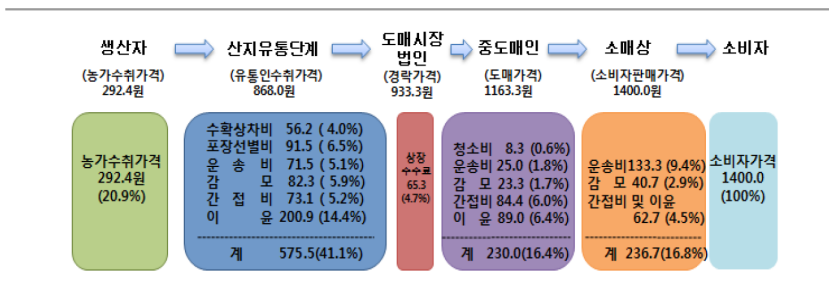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제도

1) 농수산물 유통구조

가. 농산물 유통구조

축산물과는 달리 농산물 유통구조는 영세한 다수의 유통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인 배추의 유통단계를 나타낸 그림으로서 유통구조는 크게 생산자, 산지유통단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소매상, 소비자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산지유통단계와 중도매인 및 소매상의 유통비용 비중이 전체 가격의 74.3%로 높은 수준이다. 산지유통단계는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산지유통조직이 전문화 되어 있지 못하여 소규모 출하단위로 물류가 비효율적이며, 도매단계의 경우 규제위주의 관리로 경쟁부족, 낙후된 시설 및 각종 수수료가 많아 효율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단계에서는 산지와 효율적 연계를 위한 직거래 인프라가 부족하고 소규모 소매유통 등으로 운송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관계부처 합동, 2013, pp. 1-2.).

〈그림 2-3〉 배추 유통단계별 비용 및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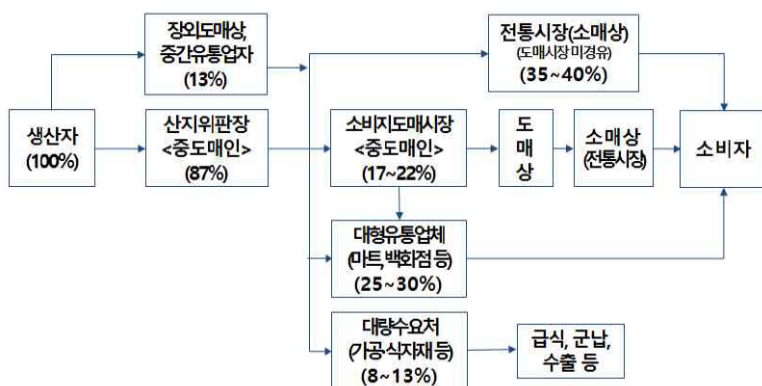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pp. 2.)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13

나. 수산물 유통구조

수산물의 유통경로는 품목별, 생산 방식별로 다양하나,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국내산이라고 알려진 연근해산 수산물의 경우, 생산자에서 수산업 협동조합 산지위판장을 통해 거래되는 비중이 약 87%이며(계통 출하⁸⁾), 나머지 13%가 중간유통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계통 출하).

〈그림 2-4〉 연근해산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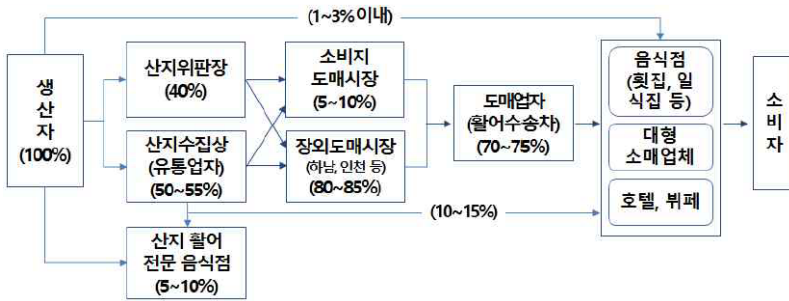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2018) pp. 50.

그러나 양식수산물의 경우 연근해산과는 달리 산지위판장보다 기타 유통단계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유통이 투명한 산지위판장으로의 비중은 40%에 불과하며, 나머지 50~55%는 유통업자를 통해 도매시장을 거쳐 음식점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음식점 등으로의 유통은 대부분 비계통 출하방식을 통한 수산물이 대부분이다.

8) 농어민이 협동조합 계통조직을 통해 생산한 농수산물을 출하·판매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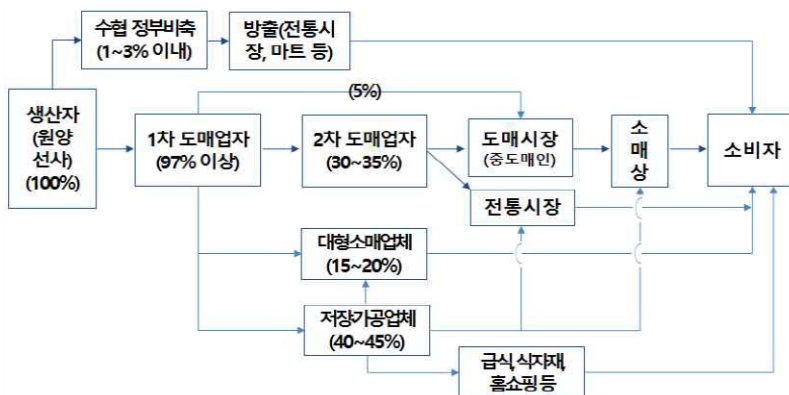
〈그림 2-5〉 양식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활어 중심)



자료: 해양수산부(2018) pp. 51.

원양산(수입산) 수산물은 연근해산이나 양식 수산물과는 달리 위 판장을 거치지 않으므로 대부분 도매업자로 넘어간다. 1차 도매업자에서 비교적 관리상태가 양호한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되는 비중은 15~20% 수준이며, 나머지 30~35%는 2차 도매업자를 거쳐 음식점 및 소비자로, 40~45%는 저장가공업체를 거쳐 급식, 식자재, 홈쇼핑으로 유통된다.

〈그림 2-6〉 원양(수입)산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



자료: 해양수산부(2018) pp. 52.

수산물 위판장 등 상장된 시장에서의 거래는 거래증빙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거래명세서 등이 발급된다. 그러나 이후 유통단계에서는 규모가 영세한 업체들이 다수 존재하여 거래증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판장 거래 이후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영세 중·도매업체들의 특성상 거래추적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거래증빙자료의 확인이 어렵게 된다.

2) 일반거래증빙

축산물과는 달리 농산물이나 수산물 거래 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각 유통단계 거래 시 영업자의 종류 및 발급의무를 부과하여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게 함으로써,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과 수산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령인 「식품위생법」에는 이러한 의무조항이 없으므로 거래명세서 발급의무도 없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가공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는 등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위생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3) 이력관리제도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농산물과 수산물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이력관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과의 차이점은 축산물 이력관리는 의무사항인 반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농수산물의 이력관리는 선택사항이라는 점이다. 과거 일

부 농산물에 대하여 의무 이력제를 도입한 바 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모두 의무이력제를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력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래증빙을 강제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입 농수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인 「관세법」에서는 현재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에서는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력제를 등록하여야 하므로, 해당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확인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수입수산물에 해당되고 본래 취지가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위생 및 용도 등 다양한 용도를 위한 이력관리제인 만큼 원산지 표시의 증빙을 관세법 유통이력제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농산물과 수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농산물 이력관리제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이력관리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의 제5절 이력추적관리에서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력추적관리의 대상, 등록 유효기간, 자료제출, 등록의 취소에 관한 조항이 있다.

〈표 2-1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력관리 관련조항

조항	주요 내용
제24조(이력추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추적관리 대상 • 이력추적관리 표시의무 • 이력추적관리 기준준수의무
제25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3년, 달리 정하는 경우 10년)
제26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가능
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사유 규정

자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이 없으므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농산물이력추적제는 2003년부터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와 병행하여 실시되어 왔으며, GAP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력추적관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2014년 9월부터 GAP 인증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를 폐지하였다. 일부에서는 이력추적관리등록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력추적대상품목이 감소하고 있어, 이력추적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자를 지정하여 농산물 이력관리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제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농산물 이력추적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표시항목에 산지가 포함되며 산지는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서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국내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림 2-7〉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1)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적음
- 2) 품목(품종):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나 이 규칙 제6조제2항 제3호에 따라 표시
- 3) 중량·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 4) 삭제 (2014.9.30.)
- 5) 생산연도: 쌀만 해당한다.
- 6) 생산자: 생산자 성명이나 생산자단체·조직명, 주소, 전화번호 (유통자의 경우 유통자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7)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붙여진 이력추적 관리번호

자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 이력추적제의 대상은 농산물 중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며, 등록사항은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별로 상이하다. 특히 생산자의 경우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와 재배지의 주소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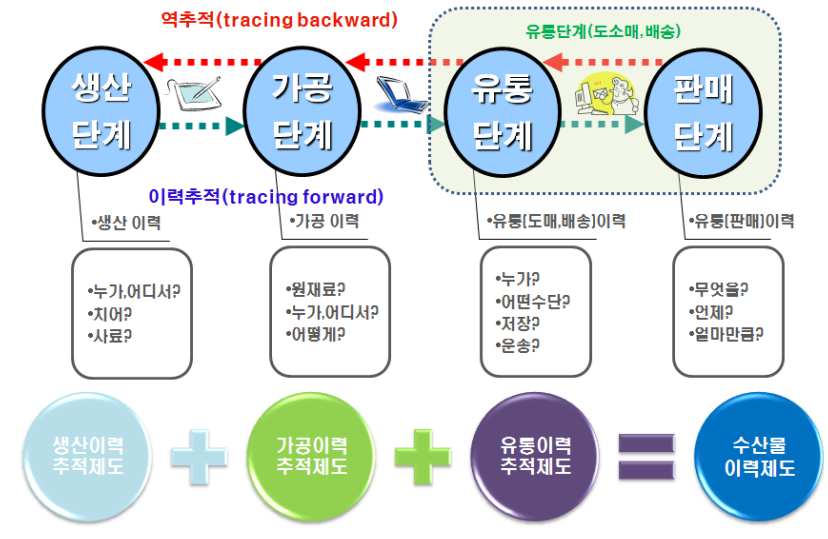
나. 수산물 이력관리제도

수산물 이력관리제도의 도입취지는 수산물 안전성 등에 문제발생 시, 원인규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08년 8월에 처음 도입되어 2019년 10월 현재까지 시행 중이며, 참여품목은 모든 수산물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수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농산물 이력관리제도와 상당한 유사점이 존재한다. 법 조항의 구성이 유사하며,

내용적인 면에서도 대상과 등록 유효기간, 자료의 제출, 취소방법 등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유사점이 존재한다.

〈그림 2-8〉 수산물 이력제 추진체계



자료: 해양수산부(2018)

수산물 이력추적을 위한 관리대상은 기본적으로 선택사항이나 의무등록대상을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개 수산물(굴비, 생굴)에 대하여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력추적관리 등록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타 이력추적과 관련한 절차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2-2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력관리 관련조항

조항	주요 내용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추적관리 대상 • 이력추적관리 표시의무 • 이력추적관리 기준준수의무
제28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3년, 달리 정하는 경우 10년)
제29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가능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사유 규정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이력신고 수입수산물 지정(해양수산부장관 고시) • 수입유통이력 자료보관(1년) • 수입수산물과 국내수산물 차별금지

자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이력제의 참여가 자율참여방식인 관계로 수산업계의 참여율이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이력표시물량이 2014년 4,714톤에서 2017년 8,108톤으로 증가하였으나,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이력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무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유통이력제가 농산물 유통이력제와 다른 점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⁹⁾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산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이란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이며, 구체적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에서 수입유통이력신고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1.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위해 발생의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산물
2.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로서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3. 그 밖에 취급 방법, 유통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이력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산물

〈그림 2-9〉 이력추적관리 수산물의 표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관리번호는 다음의 번호를 연결한 13자리로 구성하며, 다목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예시와 같이 부여한다.

- 1) 첫 네 자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양식장, 어촌계 등에 부여한 등록번호
- 2) 등록번호 다음 두 자리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부여한 제품유형별 고유번호
- 3) 제품유형별 고유번호 다음 두 자리는 연도번호로,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를 사용
- 4) 마지막 다섯 자리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부여한 식별단위(로트) 번호로 00001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로트가 발생한 경우에는 로트별로 다르게 부여한다. 수산물 생산 또는 가공, 유통 여건이 다를 경우 번호를 다르게 부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업체(등록) 번호 (4)				제품유형 (2)		년도 (2)		일련번호 (5)				
x	x	x	x	x	x	x	x	x	x	x	x	x

자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입 유통이력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로써,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은 동 자료를 근거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2019년 10월 현재 의무적으로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는 수산물은 없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수입 수산물과 국내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방안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4항에 따르면,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수산물을 국내수산물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WTO GATT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반영하는 것인데, 국내산에 비하여 수입산에 별도의 의무부과 또는 비용발생 등이 존재하면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¹⁰⁾

다. 수입 농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산 농수산물과 다른 법령이 적용된다.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에 관하여 관세청이 단속을 수행하고 있는데, 통관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가 국내 통관단계에서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관세법」 제240조의2와 관련 고시 등에서는 농수산물을 포함한 수입물품의 이력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장)

조항	주요 내용
제3조(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기준)	• 관세법상 유통이력관리가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제4조(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	• 수입물품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지정(HSK 기준)
제8조(유통이력신고 등)	•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신고사항과 제출방법, 제출서류

10) 미국 원산지 표시제도인 US-COOL을 중심으로 한 WTO 분쟁사례 참조

조항	주요 내용
제8조의2(유통이력신고 등 관리)	•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대한 세관장의 관리 명시
제9조(유통이력대상물품 보관관리)	•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거래명세서 등 증명자료 보관의무 (1년)
제10조(유통이력조사 등)	• 세관장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등 열람조사 가능
제11조(반입명령)	•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자료: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법」에 따른 수입 유통이력 대상물품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위해성 입증, 용도 확인, 원산지 확인, 기타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 우려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지정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어떤 수입물품을 이력관리할 것인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하여 구분 관리되고 있다.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 및 유통업자(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물품 양도 시에 유통이력신고를 해야 하며, 향후 이력관리를 위해 양수자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표 2-22〉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대상 농수산물

구분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019-31호)
농산물	• 황기, 냉동고추, 당귀, 건고추, 지황, 천궁, 사탕무당(설탕), 작약, 김치, 팔,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수산물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냉장홍어, 활우렁쉥이, 활막장어, 활방어

자료: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현재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고시된 농산물은 14개 품목, 수산물은 17개 품목이다. 수입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은 각 품목별로 유통이력 관리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지정기간에 한하여 유통이력의무를 준수하면 된다.

수입 유통이력관리를 하는 이유는 문제발생 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자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유통이력대상물품임을 증명하는 유통이력을 의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장부 및 관련 거래명세서 등을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세관장은 이러한 거래증빙자료를 조사할 수 있으며, 만일 수입 유통이력 관리물품 중 용도변경 또는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할 수 있다. 보세구역 반입명령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농수산물 이력제도는 크게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는데, 국내산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산물)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물)에 따라, 그리고 수입산의 경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물)과 「관세법」(수입물품)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에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 양쪽에서 수입수산물의 이력 관리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상 수입 수산물을 특정하지 않은 관계로 「관세법」에 따라 이력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3〉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 이력제 비교

구분	국내산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
관리기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도입시기	2008년 8월	2009년 5월
참여방식	자율등록	의무신고
제재조치	없음	보세구역 반입명령
비고	굴, 조기 의무시범사업 시행 중 (2018. 12~2021. 1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무이력제 시행 시까지 적용

자료: 저자 작성

관세법상 수입 유통이력 관리대상이면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표시대상인 품목은 「관세법」을 근거로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이 가능하다. 「관세법」상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 일치하지 않으나, 일부 동일한 품목이 존재한다.

〈표 2-2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 수입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산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대상수산물	관세법 수입유통이력관리대상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 수족관 보관 살아 있는 수산물 (가공품 포함): 12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꽃게,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냉장홍어, 활우렁쉥이, 활막장어, 활방어: 17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유통이력대상에 포함되는 원산지 표시 대상 (예: 뱀장어, 미꾸라지, 참돔) 	

자료: 저자 작성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문제로 거래증빙자료의 의무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외국에서 사용된 선례가 있거나 유사제도가 있다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국과의 원산지 표시제도 비교를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포함되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EU의 현행 법령을 살펴보고, 특히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및 거래증빙자료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제3절 해외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 및 분쟁 사례

1. 주요국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

1) 미국

미국의 원산지제도는 「관세법」에 특혜와 비특혜 원산지 규정 모두 규정되어 있다. 특혜 원산지 규정은 FTA가 체결될 때마다 필요한 이행법률을 「관세법」 하위에 제정하여 조항을 두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가 포함되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주로 판례에 따라 형성된 규범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관세법」, 「덤핑방지법」, 「1994년 GATT 이행법」, 「미국자동차표시법」, 「미국산 우선구매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표 2-25〉 미국 원산지 표시제도

법령	주요 내용
• 1994년 GATT 이행법	•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반 원칙
• 판례법	• 판례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규정
• 1930 관세법 제1304조의 원산지 표시 - 19 U.S.C. 1304(원산지 표시의무)	•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원산지 표시 의무

법령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CFR Part 134(표시방법 등) - 19 CFR 102.0(원산지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달품 원산지 표시 - 19 U.S.C. 2511(19 CFR 17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류와 섬유제품 원산지 표시 - 7 U.S.C. 1854 - 19 CFR 3592 - 19 CFR 12.130, 10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제품증명법(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 • 울제품표시법(Wool Product Labeling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표시법(America Automobile Labeling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조립국, 미국산 부품의 비율, 엔진과 트랜스미션 원산지 표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 41 U.S.C. 8301-83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달 목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 중 미국산 50%를 넘는 경우 원산지를 미국으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보장 및 농촌투자법, 농산물 마케팅법 - 7 U.S.C. 1638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유통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규정 포함

자료: 정재호·김미영·홍현표(2015), p. 53

관세법에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으나, 국내에서 가공·유통되어 최종 소비자(ultimate purchaser)에게 제공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 의회는 「농업보장 및 농촌투자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 또는 2002 Farm bill)」에서 원산지 라벨링 규정(COOL: Country of Origin Labeling)을 제정,¹¹⁾ 신선 과일과 채소,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수산물, 땅콩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는 국내 업계의 반발과 캐나다의 WTO 제소 등으로 「농산물마케팅법(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으로 개정, 2015년 12월 18일부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제외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운영 중이다.

11) 7 U.S.C. 1638a §

미국 내 농산물 원산지 표시의무자는 소매상이며, 소규모 상인이거나 식당 등 외식업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전익수 2016, pp. 2.) 원산지 표시제 준수 대상자 중 부패성 농산물을 판매하는 '소매인(retailer)'은 거래규모가 연간 23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보통 식료품점 및 슈퍼마켓 등이 해당된다. 부패성 농산물(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에는 신선 및 냉동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어시장, 정육점은 표시의무가 면제되고 식당과 다른 음식 서비스점(카페테리아, 간식식당, 구내식당, 기관시설 등)도 의무가 면제된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 의무의 부과여부는 판매되는 상품의 양이 일정 수준을 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¹²⁾

소매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소매인이나 공급자 모두 원산지 및 생산방식에 관한 정보를 증명하는 기록을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매인이나 공급자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소매상점 점검(retail store review), 후속 소매상점 점검(follow-up store review), 공급자 이력 감사(supplier traceback audit), 불만접수 점검, 소비자 불만 제보에 따른 점검(complaint-driven compliance investigation) 등이 행해진다. 고의적 규정위반의 각 건에 대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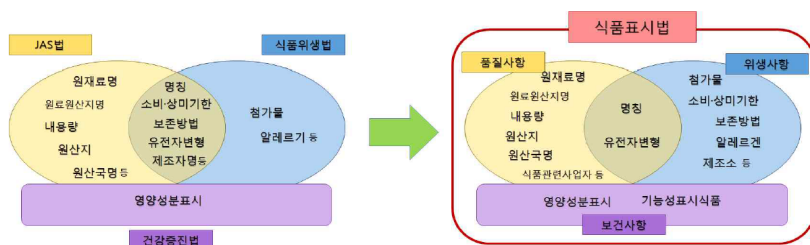
일본의 원산지 관련 법령은 크게 수출입통관단계(통상법)와 국내 유통 및 판매단계(경쟁법)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법 분야에는 「관세법」, 「수출입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상공회의소법」 등 수출입 통

12) 미국 농무부(USDA)(검색일: 2019. 10. 21)

관단계에서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있으며, 경쟁법 분야는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JAS)법」, 「부당 경쟁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구분된다. 경쟁법에 해당되는 법률은 개별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령의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집행된다.

2015년 4월 「식품표시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기 「JAS법」(원산지)과 기타 식품과 관련된 「식품위생법」(위생사항), 「건강증진법」(영양성분)에 산재되어 있던 식품표시기준이 「식품표시법」 및 「식품표시기준」으로 통합되었다. 통합 이전까지 다수의 법령에 걸쳐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식품표시와 관련된 기준이 복잡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법 집행에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2011년부터 식품표시일원화검토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식품위생법」, 「JAS법」, 「건강증진법」 중 식품표시와 관련된 것을 일원화하여 「식품표시법」이 제정되었다.

〈그림 2-10〉 58개의 구 표시기준을 식품표시법에 근거한 식품표시기준 1개로 통합



자료: 식품안전정보원(2015), p. 14

일본 소비자청은 2017년 9월부터 강화된 「새로운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김민아, 2017 p.1.)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 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표시법」 및 하위규정인 「식품표시기준(2019년 내각부령 제17호)」의 개정에 따라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원산지 표시의무가 모든 식품으로 확대 적용되어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신선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식품표시기준 제18조, 제19조)」,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식품표시기준 제3조, 제4조)」 그리고 「유전자조작식품의 표시기준(식품표시기준 제3조)」으로 구분하여 원산지를 포함한 식품의 표시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2-26〉 식품표시법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원료 원산지 표시 대상 가공식품 (22식품군과 4품목)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가공되는 모든 가공식품 (수입품 제외)
* 원료 원산지 표시 대상 원재료 제품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0% 이상인 원재료와 별도로 정한 4품목의 원재료	원칙적으로 제품에서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상위 1위인 원재료(대상원재료) * 22식품군은 현행대로 추진, 개별 4품목에 '오니기리' 추가

자료: 김민애(2017), p. 1

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2005년 7월 농림수산성의 검토회가 「외식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지침」을 책정하였고, 매장 가공식에 관해서도 2011년 6월 (사)일본반찬협회가 「반찬·도시락 정보 제공 지침」을 수립하고, 원재료명, 원료원산지명 표시 등의 정보 제공을 촉진하고자 하였다(消費者庁, 2018, pp. 1.). 일본 정부는 외식이나 매장 가공에 의한 반찬, 도시락 판매 등의 중식(中食)¹³⁾은 매일 식재료를 조달하고 사용하는 원료의 종류가 많은데다 기후 등의 영향으로 산지가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원료 원산지 표시를 법적으로 의무

13) 슈퍼나 편의점 등 외부에서 먹을 것을 사와 집에서 먹는 식사로 일본에서는 중식이 늘고 있다.

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점포에서는 사업자와 직원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식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적인 제도의 특성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고 있다.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이 50%를 초과하며, 향후 원산지 표시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일본 농림수산성은 분석하고 있다. 다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에 의해 처벌된다.

「식품표시법」에는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보관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농림수산성 원산지 표시 관련 공개자료를 통하여 거래증빙서류로서 원산지가 기재된 ‘공급전표(仕入伝票)’를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식품표시법 거래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

Q: “공급전표 및 제품규격서 등 표시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한다는 것은, 반드시 서류로 보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A: 공급업자 등으로부터 구두로 원산지를 듣거나 또는 들어서 직접 메모하거나하는 것이 아닌, 공급전표 등 표시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급업체로부터의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있는 것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外食・中食産業等食品表示適正化推進協議会(2019), pp. 17

3) EU

EU의 원산지제도는 통관단계에서의 「관세법」과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쇠고기 표시 규칙」과 「식품라벨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저, 「관세법」¹⁴⁾에서는 통관절차와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증명 등 통관에 필요한 원산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관세법」에서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데, 원산지와 관련한 일반원칙은 「관세법」에 두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법 시행규칙」¹⁵⁾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유통단계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광우병을 계기로 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¹⁶⁾와 이후 기타 육류 및 식품 등으로 범위를 넓힌 「식품라벨규정」¹⁷⁾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원산지 표시제도

EU의 이력추적관리제도는 1996년 영국에서 발병한 광우병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주문배, 2011, pp. 10~15.)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가 도축되어 유통 및 소비되는 과정에서 해당 쇠고기를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였다. 프랑스 역시 1997년 광우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여 EU 위원회는 「식품위생 안전에 관한 일반원칙」에서 모든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이력추적을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원칙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어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EAN (European Article Numbering) 바코드를 부착, 판매시점부터 도축장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쇠고기 표시를 강제로 의무화하는 「쇠고기 표시규칙」¹⁸⁾을 채택하고 2001년 1월부터 모든 회원국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타 식품에 대

14) Regulation EU No.952/2013(EU Regulation No. 2019/632로 일부 개정).

15) EEC No. 2454/93.

16) Regulation(EC) 1760/2000.

17) Regulation(EU) 1169/2011.

18) Regulation(EC) 1760/2000, Beef Labeling regulation.

해서는 「식품법」¹⁹⁾에 따라 EU 내의 모든 농식품 및 사료업체에서 이력 추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유통단계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식품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제1169/2011호 EU 규정」²⁰⁾ 및 이행규정²¹⁾에서 소비자에게 음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국 식품 사업자에 대한 필수요건을 설정, 유제품 또는 육류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소해면상뇌증(BSE) 전염병의 결과로 2002년 1월 1일부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원산지 표시(출생지, 사육지, 도축지, 가공처리지역 포함)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원산지 표시의무²²⁾는 생선과 쇠고기, 과일, 야채, 벌꿀, 올리브유 및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하는 제품 등에 한정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 및 이행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대상을 돼지고기, 양고기, 산양고기, 가금류(생선, 냉장·냉동육)까지 확대하였다.²³⁾ 또한 2020년 4월부터는 일부 내용이 강화되어 식품의 원산국과 식품 주원료의 원산국이 다르다면 주원료의 원산국을 표기하거나, 원산국이 식품의 원산국과 다르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EU의 규정에 추가하여 각 EU 회원국들은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회원국의 추가적인 원산지 표시 의무 부과는 자유로운 교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전에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Regulation(EC) 178/2002, General Food Law Regulation.

20) Regulation(EU) 1169/2011. 종전 식품표시지침(directive 2000/13/EC)에서 개정. 지침(Directive)은 EU 법령을 회원국의 법령에 도입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규정(Regulation)은 회원국의 EU 법령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회원국에 그대로 적용함.

21) Implementing regulation 1337/2013.

22) Directive 2000/13/EC.

23) Implementing regulation 1337/2013.

미국은 유럽연합 8개국(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및 개정 내용이 무역을 저해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특히 EU의 국가별로 원산지 표시가 요구되는 품목, 성분, 표기 문구, 표기 정보 등이 상이하며 일부 규정은 EU 회원국, 터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에 선택적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조성주·오새라·박수연, 2019 pp. 12.).

〈표 2-28〉 회원국별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 현황

국가	대상품목	적용기간
그리스	•밀크와 유제품에 사용된 밀크원료 •로열젤리	2017.10.18.부터 30개월
스페인	•밀크와 유제품에 사용된 밀크	미발효
프랑스	•밀크와 원료로 사용된 밀크, 육류	2017.1.1.부터 2018.12.31.
이탈리아	•밀크와 유제품에 사용된 밀크원료	2017.4.18.부터 2019.3.31
	•듀럼밀가루파스타에 사용된 듀럼밀	2018.2.13.부터 2020.3.31.까지
	•쌀	
	•토마토통조림, 토마토 과즙 및 소스 (토마토 함유량 50% 이상)	2018.2.27.부터 2020.3.31.
	•식품의 생산지	
리투아니아	•밀크와 유제품에 사용된 밀크원료	
포르투갈	•밀크와 유제품에 사용된 밀크원료	2017.7.1.부터
루마니아	•밀크와 유제품	2018.1.1.부터
핀란드	•밀크와 유제품에 사용된 밀크원료, 식품에 사용된 육류 •신선, 냉장 그리고 냉동 육류,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비포장식품에 사용된 원료육류	2017.6.1.부터 2019.5.31.까지

자료: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2018), pp. 1~11

(2)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EU 차원에서 음식점 등은 원산지 표시제의 의무 이행 대상이 아니다.²⁴⁾ 그러나 일부 회원국에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음식점에서도 표시하게끔 의무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아일랜드, 핀란드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가. 프랑스

프랑스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가행정원 재정분과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2002년부터 도입되어 프랑스 「행정법 2002-1465」²⁵⁾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은 쇠고기 또는 쇠고기가 포함된 요리에 한정되어 있으며 분쇄육을 포함한 쇠고기를 사용한 메뉴를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음식점이 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는 음식점에서 사용된 쇠고기의 출생, 사육, 도축국가가 동일한 경우 원산지(국가명)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국가명)를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메뉴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나.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Health(Country of Origin of Beef) Regulation 2006 (S. I. No. 307 of 2006)」²⁶⁾을 근거로 하여 2006년부터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는 아일랜드 식품안전기구(FSAI: Food Safety Authority of Ireland)를 대표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검색일: 2019. 10. 19)

25) The Official Journal of the French Republic(2002)

26) Government of Ireland(2006)

하여 보건부(HSE: Health Service Executive)의 보건환경관(EHO: Environmental Health Officers)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쇠고기의 출생, 사육, 도축된 원산지(국가명)를 메뉴판, 창문이나 출입문 또는 업소 외부에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간판 또는 게시판, 업소 내부의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간판 또는 게시판을 통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음식점들은 규정에 의해 쇠고기의 원산지를 증명해주는 이력추적정보를 최소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보건환경관(EHO)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다. 핀란드

핀란드의 식당은 2019년 5월 1일부터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 및 가금류의 원산지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한다. 핀란드 농림부에서 발행한 규정(Regulation issu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154/2019)²⁷⁾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의무는 식당, 키오스크 등 신선, 냉장 또는 냉동 육류를 제공하는 외식 시설에 적용되며, 다진 고기의 원산지 국가도 표시해야 한다. 동 규정은 2021년 4월까지 2년간 유효하다.

육류 원산지 표시방법은 ‘원산지 국가: (EU 회원국 또는 다른 국가의 이름)’으로 표시하며, 육류 원산지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경우 ‘EU’ 또는 ‘EU 이외의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핀란드산의 경우에는 핀란드산 육류를 나타내는 ‘Hyvää Suomesta’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순록, 말고기 및 육류 제품은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기성품 및 조리된 쇠고기 스테이크 또는 절인 닭고기 필레를 음식으로 준비

27) Finnish Ministry of Justice(2019)

한 경우에도, 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선·냉장 닭고기 필레가 식당에서 요리되면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핀란드 식품 안전청(Finnish Food Authority), 2019).

4) 원산지 표시제도 비교

농수축산물이 수입·생산되어 유통 및 판매되는 경우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규정하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한국과 미국, 일본, EU 모든 국가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국산농산물 220 품목, 수산물 191품목 등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2 Farm Bill」, 일본은 「식품표시법」, EU는 「Regulation 1169/2011」에서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9〉 주요국 원산지 표시제도

구분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 근거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의무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과일과 채소,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해산물, 땅콩 등 (의무) • 근거법: 2002 Farm bill 	없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신선, 가공식품(의무) • 근거법: 식품표시법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권고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과일 및 야채, 수산제품, 꿀, 올리브유 및 계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의무) • 근거법: Regulation(EU) 1169/2011 	회원국 개별 의무화(프랑스, 아일랜드, 핀란드 의무화 시행)

자료: 저자 작성

그러나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일부 EU 국가들에 한하여 의무시행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의무도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차원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회원국 자율적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도입하고 있는데, 프랑스, 아일랜드, 핀란드가 이에 속한다. 다만, 일본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관련 거래증빙자료 보관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²⁸⁾

2. 원산지 표시 분쟁 사례

1) 사건배경

미국은 2008년 8월 「농산물마케팅법(Agricultural Marketing Act)」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육류 상품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라벨링(COOL: Country of Origin Labelling)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표 2-30〉 US COOL 제도 개요

목적	소비자에게 제품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
관련기관	• USDA, 유통규제프로그램(MRP), 농업유통서비스(AMS)
표시주체	• 영업허가를 받은 소매업자(레스토랑, 샐러드 바, 카페 등 음식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표시대상	•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생선, 과일, 야채, 땅콩 • 가공을 통해 제품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제품은 제외(예: 초밥, 참치캔)

28) ASPA WHITE PAPER(검색일: 2019. 9. 20).

목적	소비자에게 제품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
원산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 : 미국에서 출생, 사육, 도축된 것에 대해서만 미국산으로 판정 • 생선 : 양식은 미국에서 부화, 사육, 가공된 것만 미국산으로 인정하나, 어획은 미국 수역에서 또는 미국선적이 잡은 경우 미국산 인정
기록보관	• 전자적 또는 종이서류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의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 「WTO SPS 분쟁사례 자료」, pp. 24~27

육류에 대해서는 미국산 원산지 표시는 모든 생산활동(출생, 사육, 도축)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단계별로 관련 국가를 표시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동물의 출생, 사육 및 도축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4개의(카테고리 A부터 D) 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표 2-31〉 US-COOL 제도 육류 원산지 표시 방법

분류	요건	원산지 라벨링 표시
Category A (미국산)	완전하게 국내에서 출생(born), 사육(raised) 및 도축(slaughtered)	미국
Category B (복수국산)	완전하지 않으나, 국내에서 출생, 사육 또는 도축된 경우	미국, 수출국
Category C (수입도축)	해외에서 출생, 사육되었으나, 도축을 위해 미국 내 수입된 경우	수출국, 미국
Category D (외국산)	해외에서 출생, 사육, 도축된 경우	수출국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 「WTO SPS 분쟁사례 자료」, pp. 24~27

이러한 미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에 대하여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해당 조치로 인하여 자국산 육류 상품이 미국산 상품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8년 12월 TBT 협정 위반을 근거로 WTO에 제소하였다.

2) 주요 쟁점

(1) 내국민대우 위반

WTO TBT 협정 제2.1조²⁹⁾는 WTO의 기본원칙인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모든 회원국이 수입 물품에 대하여 내국물품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무역에 규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 뿐만 아니라 체결한 모든 FTA에서도 WTO TBT협정의 내국민 대우원칙을 수용하고 있어, 내국민대우 원칙은 모든 국제통상 거래의 원칙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COOL 제도가 쇠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의 각 생산 단계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TBT 협정 제2.1조의 내국민대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육류제품이 북미지역 통합 유통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COOL 제도는 캐나다산 소·돼지의 미국 내 가공에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가공업자는 캐나다산 동물과 정육 가공을 위한 별도 시설을 두어야 하므로 캐나다산 정육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가격상승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가공업자들은 캐나다산 소·돼지 구입을 기피하게 되고, 구입하더라도 특별할인행사 등의 경우에만 구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미국은 COOL 제도는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WTO 규정에 부합하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며, WTO 출범 이전부터 많은 국가들이 원산지 관련 제도를 타당한 정책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9) WTO TBT

(2) 불필요한 무역제한 금지 위반

WTO TBT 협정 제2.2조³⁰⁾에서는 각 회원국이 기술규정을 도입함에 있어 국제무역에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산지 표시와 같은 규정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단지 무역 규제만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무역 규제가 허용되기도 하는데,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등은 ‘정당한 목적’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

캐나다는 COOL 제도의 목적이 미국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며, 미국이 주장하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TBT 협정 2.2조에서 규정한 ‘불필요한 무역 제한 규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COOL 제도의 의무적 원산지 표시 방식이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미국은 COOL 제도가 미국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하여 의무적 원산지 표시 방식이 적절한 수단임을 주장하였다.

3) 패널 판정³¹⁾

패널은 미국산 육류와 수입산 육류는 TBT 협정 제2.1조상의 동종성 판단 기준에 따라 서로 같은 상품임을 인정하였고, 미국의 해당

30) WTO TBT

31) WTO(2018)

조치는 원산지만을 기준으로 상품을 구별하는 조치임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판매되는 상품이 절단된 형태의 육류의 조합이고, 이것들이 다양한 원산지의 가축으로부터 얻어진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육류 상품의 가공에 국내산 가축의 이용이 권장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수입 육류제품에 사실상(de facto)의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다.

TBT 협정 제2.2조는 어떤 기술규정이 본래의 목적에 비하여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부문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원산지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해당 조치가 도입되기 전의 원산지 표시제도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실제로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동 원산지 표시 조치는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정하였다.

4) 상소기구 판정³²⁾

상소기구는 먼저 내국민대우 조치에 관하여 미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불리한 대우’를 발생시킨다며 패널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추가적으로 수입상품의 수입시장 경쟁 조건의 변경 여부가 ‘불리한 대우’ 요건의 전부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특히 생산자와 가공업자 등 해당 조치를 준수해야 하는 자들의 정보의 양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반면, 소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실제로 비례하지도 아니함을 주목하여 해당 조

32) WTO(2019)

치에 따른 규제적 구분은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내국민대우 원칙의 위반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TBT 협정 제2.2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패널의 판정과 달리 실제로 원산지 표시 조치가 해당 목적(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완전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함을 강조하였다. 즉, 미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은 TBT 협정 제2.2조 불필요한 무역 장애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제3장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운영 현황

1.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활동

우리나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는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관세청 등에서 합동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점 등에 대한 단속업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³³⁾ 단속기관은 농수산물을 조사할 때 업종, 규모, 거래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단속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 단속절차는 원산지 표시 단속반 편성 후 표시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홍보 및 위반행위 조사와

3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제1항. 관세청이 수행하고 있는 수입유통이력물품에 대한 관리는 해양수산부로 2020년 하반기 이관 예정

단속, 수사를 수행한다.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행위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대상인지 아니면 형사 처분 대상인지 구분된다.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거짓표시의 경우 직접 수사를 통하여 검찰 송치할 수 있으며 형사고발을 통하여 경찰에 넘길 수도 있다.

〈그림 3-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단속절차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색일: 2019. 11.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은 공무원 정원표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데, 2019년 현재 총 251명의 공무원이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본원 품질관리과가 원산지 표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25명이 원산지 표시 관리업무를 포함한 수산물 품질인증, 이력추적관리,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전국 14개 지원³⁴⁾에서 원산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담자 284명, 단속가용인력 1,100여 명인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단속비율을 2021년에는 20%까지 늘리기 위하여 원산지단속인력 확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양수산부, 2019).

현재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은 상당부분 개인적인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미표시 여부는 단순한 사

34) 부산, 인천, 인천공항, 서울, 평택, 장항, 목포, 완도, 여수, 제주, 통영, 포항, 강릉, 전주

실 확인만으로 해결 가능하나, 거짓표시(허위표시)는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음식점 등의 운영자가 고의를 가지고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였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노하우 습득에는 많은 경험이 누적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담당 공무원이 이와 같이 단속할 수는 없다.

〈표 3-1〉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정원 현황

단위: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농산물	1,436	1,440	1,421	1,408	1,404	1,425	1,437
수산물	202	210	207	205	215	226	251

자료: 농산물(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수산물(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대상은 크게 유통판매업소와 음식점 등(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으로 구분되는데, 2018년 기준 유통판매업소는 총 327,920개, 음식점 등은 총 701,708개소로 총 1,029,628개로 확인된다. 업소별로 보면 유통판매 업소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가공업체로서 83,764개이며, 이어 전통시장점포가 56,808개, 통신판매업이 41,653개, 노점상 40,621개 순이다.

〈표 3-2〉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수

단위: 개

종류	업소수	종류	업소수	종류	업소수
백화점	101	전통시장점포	56,808	소분업체	22,018
대형매장	557	소매업체	21,739	수입업체	37,023
중소형마트	11,446	횃집	7,219	노점상	40,621
도매시장점포	4,971	가공업체	83,764	통신판매업	41,653
합계			327,920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018), pp. 29-30

음식점 등을 살펴보면, 총 701,708개 중에서 일반음식점이 540,451로 가장 많으며, 이어 휴게음식점이 113,286개, 집단급식소 39,385개, 위탁급식소 8,586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수산물 음식점 등 업소 수

단위: 개

	전국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업소 수	701,708	540,451	113,286	8,586	39,385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018) pp. 29-30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단속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횟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09년 2,037건에서 2018년 12,23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속업소 수도 같은 기간 19,622개에서 109,011개로 약 5배 증가하였다. 다만, 단속 인원수는 같은 기간 8,741명에서 18,527명으로 약 2배 증가하여 1인당 단속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실적은 2009년 1,315건에서 2018년 818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원산지 표시위반 건수 및 금액이 2009년에 예외적으로 높으며, 이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위반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 분석하면, 과태료 대상인 단순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형사 처분 대상인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건수는 2012년을 제외하고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연도별	단속 회수	단속 연인원	단속 업소 수	원산지 표시 위반현황				
				합계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거짓(허위) 표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12,234	18,527	109,011	818	655	70	163	2,332
2017	12,416	19,111	106,114	677	514	62	163	3,409
2016	11,172	18,118	93,713	742	593	77	149	5,486
2015	8,754	15,124	67,622	769	609	84	160	2,350
2014	8,548	14,833	60,777	626	477	37	149	821
2013	2,087	6,671	18,986	726	567	54	159	742
2012	2,678	8,480	23,999	593	504	50	89	700
2011	2,079	7,834	19,034	1,005	845	60	160	970
2010	2,035	7,944	20,328	1,180	1,006	99	174	7,142
2009	2,037	8,741	19,622	1,315	1,120	93	195	21,800
2008	1,878	7,854	12,579	925	738	64	187	8,100
2007	1,809	8,548	13,060	1,073	970	77	103	1,196

자료: 해양수산부(2019) 내부자료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를 관할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조사장소 230,380개소 중 3,951개소를 단속하여 약 1.7%의 적발률을 보였으나, 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106,114개소 중 677개를 단속하여 약 0.6%의 적발률을 나타낸다. 원산지 단속실적을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커지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총 단속실적 중 거짓표시 단속비중이 63.8%인 반면, 수산물품질관리원의 거짓표시 단속비중은 24.1%로 나타났다. 거짓표시는 원산지 표시된 사항이 실제 원산지와 다르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만큼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거래증빙자료의 보관이 거짓표시 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3-5〉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단속 실적(2017)

단위: 개소, %

구분	조사장소	단 속 실 적					
		합계	비중	거짓표시		미표시 등	
				소계	비중	개소	비중
농관원	230,380	3,951	1.7	2,522	63.8	1,429	36.2
수품원	106,114	677	0.6	163	24.1	514	75.9
지자체	211,480	1,292	0.6	268	20.7	1,024	79.3
관세청	298	49	16.4	2	4.1	47	95.9
합 계	548,272	5,969	1.1	2,955	49.9	3,014	50.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 내부자료

2.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

원산지 표시 단속과 교육훈련, 홍보 등을 수행하는 이유는 원산지 표시대상자들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원산지 표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원산지 표시단속을 수행함에도 실제 원산지 표시 이행률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해당 단속 활동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보완할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대상자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설문조사 방식을 통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단속의 성과는 크게 원산지 표시 이행률과 표시율로 구분되어 분석되는데, 이행률은 조사업체 중 이행한 업체(원산지 표시품목이 전체의 80% 이상이면 이행한 것으로 간주) 수의 비율이며, 표시율은 조사품목 수 중 원산지 표시를 적절히 이행한 품목 수의 비율이다.

〈표 3-6〉 원산지 표시 이행률과 표시율

단위: %

구분	기준
이행률	이행업체 수* / 조사업체 수 × 100
표시율	이행품목 수 / 조사품목 수 × 100

주: 이행업체: 원산지 표시품목이 전체 80% 이상인 업체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018) pp. 14

자료 확보가 가능한 2011년 이후 원산지 표시 성과를 살펴보면, 원산지 표시 이행률과 표시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단위의 원산지 표시 이해수준을 나타내는 원산지 표시 이행률은 2011년 71.2%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2018년에는 91.1%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원산지 표시를 나타내는 표시율은 이행률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2011년 89.7%에서 2018년 98.2%로 이제는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에 원산지 표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7〉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과 표시율 현황

단위: %

	'11	'12	'13	'14	'15	'16	'17	'18
이행률	71.2	80.5	85.0	88.1	89.1	90.2	90.5	91.1
표시율	89.7	90.0	90.8	93.7	93.7	98.0	98.1	98.2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018) pp. 14-16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중소형 마트는 이행률이 97~100%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소매업체, 횡집은 80~95% 수준으로 원산지 표시를 상당 부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노점상과 음식점은 68~90%로 아

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점상과 음식점은 2015년에 비하여 원산지 표시 이행률이 악화되거나 변동이 없는 수준으로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지원수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표 3-8〉 업체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백화점	대형 마트	중소형 마트	도매 시장	전통 시장	소매 업체	횃집	노점상	음식점
2018	91.1	100	100	100	89.7	94.8	95.0	95.1	68.0	83.2
2017	90.5	100	100	98.8	90.3	94.9	92.5	94.4	70.0	82.2
2016	90.2	100	100	97.6	91.7	93.3	94.5	93.6	82.0	82.2
2015	89.1	100	100	97.4	83.3	90.5	82.0	84.7	68.0	90.8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018) pp. 14-16

제2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문제점

지금까지 원산지 표시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바, 현재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는 다음 네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를 발급·보관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단속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음식점 등에 원산지 표시를 증빙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보관의무를 두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수산물 거래 시 거래명세서 등 발급의무를 두고 있는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수산물은 이러한 근거 법령이 없으며 축산물의 경우에만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유통구조가 불투명하여 유통판매자 영업의 종류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거래증빙자료의 발급 의무의 부과가 어렵다. 거래증빙자료 의무 부과를 위해서는 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현재 수산물 전체의 관점에서 분석된 바로는 의무 부과 대상자가 특정되기 어렵다. 유통단계가 명확한 축산물과는 달리, 수산물은 생산방식별, 품종별 유통구조가 상이하여, 의무부과 대상자 또한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수산물 이력제의 참여율이 낮아 원산지 표시의 증빙으로 사용되기 어렵다. 현재 수산물 이력제를 추진 중이기는 하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서 수산물 유통업체는 이력제를 도입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의 증빙이 가능한 대상은 이력제를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국한된다. 그러나 현재 수산물 이력제의 참여율은 높지 않아, 의무 도입시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넷째, 재래시장 등 영세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률이 낮은 수준이다. 수산물 유통판매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노점상, 음식점 등은 원산지 표시 이행률이 다른 유통업체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이는 거래증빙자료의 부재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1. 수산물 거래명세서 등 발급의 법적 근거 부재

음식점 등의 운영자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증빙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통업자로부터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해야 하나, 유통업자는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거래명세서 등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의 증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각 유통단계별 당사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각 당사자에게 음식점 등의 운영자에게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이력관리법」에서는 원산지를 포함한 이력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증빙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증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의 발급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이행될 수 없으며, 원산지 단속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개설, 산지중도매인에 관한 자격,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 수산물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발급 의무에 관한 조항은 없는 상태다.

발급의무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은 원산지 표시 단속 시 나타난다. 음식점 등에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수산물 거래명세서 등을 통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현재 이러한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 음식점 등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은 정황상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산지 거짓표시를 입증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은 원산지 표시 단속행위가 누적되면 단속업소 수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산지 적발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는 음식점 등에 표기된 원산지가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인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전담인원은 단속업소 수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2. 불투명한 수산물 유통구조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의 발급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거래 유통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의 근거가 되는 거래 명세서 등을 적절히 보관하기 위해서는 거래 명세서를 원활히 발급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는 투명한 유통구조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명한 유통구조의 특성으로는 단순한 유통거래 단계, 단일화된 거래 창구, 유통거래 당사자의 역할 규명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축산물은 투명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장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유통구조에서 살펴보았듯이, 농가에서 출하된 소와 돼지는 세 단계(생산·도축업자-식품포장처리업자-도소매)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단순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음식점 등 운영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래 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는 당사자는 생산·도축업자와 식품포장처리업자로 서류 발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가축은 도축장을 거쳐야 하므로 단일화된 유통 창구를 가지

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산된 축산물의 관리가 용이하다. 무엇보다 거래 당사자의 역할 규명에 있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서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영업의 세부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 거래 명세서 등의 발급이 필요한 당사자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산물은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단일화된 유통창구가 존재하지 않는 등 축산물과 비교하여 유통구조가 불투명하다. 먼저, 수산물 유통구조는 연근해산 수산물과 양식 수산물이 상이하며, 양식 수산물은 산지위판장 이외에도 산지수집상 및 산지 활어음식점, 소비지 도매시장, 장외도매시장, 도매업자 등 다양한 종류의 유통업자가 존재하여 복잡한 유통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양식 수산물은 단일화된 유통창구라 할 수 있는 산지위판장의 매매비중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수산물의 유통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산물 유통과정에 있는 각 도소매업자들의 기능, 역할이 불분명하고 중복적으로 위치해 있어 거래 명세서 등을 발급해야 하는 당사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수산물 유통체계로 인하여 현재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의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수산물 이력제 참여율 저조

유통업자가 수산물 이력제에 등록하게 되면, 이력번호를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하여 발급해야 되는데 이력번호에 원산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거래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래명세서와 함께 이력관리법령에

따른 이력관리번호를 원산지 표시의 증빙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축산물의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자 등이 판매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산물의 경우에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수산물 이력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산물 이력제의 활용률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물 이력제 참여업체는 2016년 기준 총 7,066개로서 비중은 2.2%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참여비중

단위: 명, %

구분	생산자	비중	유통판매자	비중	참여업체	비중
2013	2,880	1.6	68	0.0	2,948	0.9
2014	3,148	1.7	81	0.1	3,229	1.0
2015	4,180	2.3	106	0.1	4,286	1.3
2016	6,960	3.8	106	0.1	7,066	2.2

주: 모집단: 생산자 183,665, 유통판매자 143,646, 총 327,311명

자료: 해양수산부(2018) pp. 70

자율적인 이력관리 제도를 의무화시키면 이력관리제도 참여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9년 10월 현재 수산물 의무이력 제도는 시범단계를 운영 중인 상황으로서, 향후 이력제 참여율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입산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은 의무적으로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관세청장 고시로 운영 중인 ‘수입유통이력신고제도’가 2020년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수입수산물에 대한 이력관리제도는 국내산 수산물 이력관리제도와 함께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음식점의 낮은 원산지 표시 이행률

유통업계 전반의 원산지 표시 이행률 및 표시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식점과 노점상의 원산지 표시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과 노점상은 수산물 유통단계의 맨 끝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유통단계 중 원산지 표시 및 관련 거래증빙자료가 제대로 발급·보관되지 않아 원산지 표시 이행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제 4 장

수산물 원산지 거래증빙자료
비치·보관의무 도입방안제1절 수산물 원산지 거래증빙자료
비치·보관의무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제3장에서 살펴본 수산물 거래증빙자료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거래증빙자료의 발급 및 보관의무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의 의무도입으로 원산지 표시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수산물 거래 당사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종의 규제이므로 정책당국은 다른 국가와의 비교 및 국제법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제도의 도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수산물 원산지 거래증빙자료의 발급·보관의무 도입은 관련 업계 당사자 및 정부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간 유통업자와 음식점 등 운영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법령 개정에 앞서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인식조사가 필요하다. 법 개정에는 따른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적용에 무리가 없는지, 그리고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가능한 도입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1. 조사 개요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 발급과 보관의무 도입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음식점 등 운영자, 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유통판매업자, 그리고 원산지 표시단속을 수행하는 당사자다.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 의무도입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위 세 당사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음식점 등 운영자를 대상으로 거래증빙자료 보관상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는 원산지 표시법상 거래증빙자료의 보관의무가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조사대상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원산지 미표시)으로 지난 1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 영업자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수입·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의 발급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수입자는 수입 수산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단계와 이를 국내로 유통시키는 당사자로, 원산지 표시 관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소매단계의 직전에서 수산물을 공급하는 국내유통업자들은 원산지 표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주체로서, 이들이 발급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근거로 음식점 등의 운영자가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로 하여금 원활하게 원산지가 표시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당국 관련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거래증빙자료의 보관이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단속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직접 원산지 표시단속을 수행하는 당사자(수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서, 정책적 관점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표 4-1〉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 의무도입에 관한 인식조사 대상

구분	음식점 등 운영자	유통판매자	정책당국
조사 내용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 보관상 애로사항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 발급상 애로사항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의 보관이 효율적 단속에 미치는 영향
조사 대상	2018년도 원산지 미표시 대상자 공표대상자 총 36개	원산지 표시대상품목별 주요 수입 및 유통업자 12개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관련업계 전문가(연구기관)

자료: 저자 작성

2.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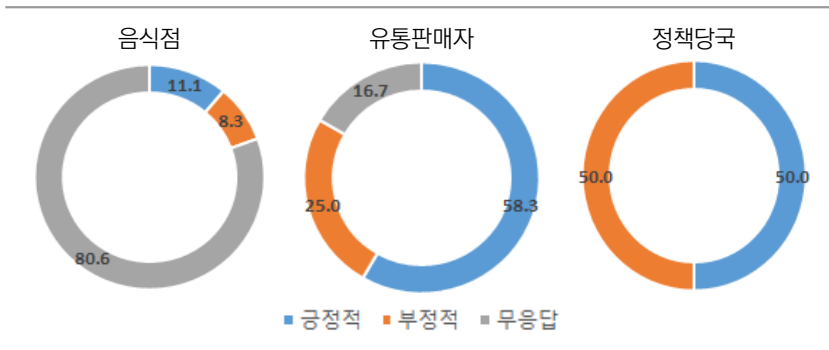
1) 조사결과 요약

음식점 등 운영자, 유통판매자, 정책당국으로 구분하여 전화 및 면접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면이 아닌 구두질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관계로, 이를 연구자가 ‘긍정적’, ‘부정적’, 또는 ‘무응답’으로 구분 분류하여 결과를 요약하였다.

음식점 등 운영자의 경우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긍정 및 부정적 답변은 소수에 그쳤다. 반면 유통판매자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이 58.3%, 부정적 답변이 25%로 나타나, 의무도입에 대한 찬성의견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산지 표시 단속당국 및 관련 연구자 집단의 경우 긍정 및 부정 답변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구분은 전반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수준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1〉 거래증빙자료 발급·보관의무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2) 음식점 등 운영자

(1) 유통판매업자의 거래명세서 등의 성실한 발급 우선

음식점 등 운영자 중 거래증빙자료의 의무도입에 대하여 큰 거부감을 갖지 않거나,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조사대상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 보관의 의무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증빙자료의 의무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음식점 등의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의 책임이 자신이 아니며, 중간 유통업자가 제대로 원산지 표시를 이행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거래명세서 등 근거서류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면 되므로, 단순히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를 보관·관리하는 수준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산물 공급자가 전산화된 거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음식점 등의 운영자가 요청할 경우 거래명세서를 발급해 준다면, 거래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불필요한 관리비용의 증가 초래

다수의 음식점 등 운영자들은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지만,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보관의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규제조치가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되며, 경우에 따라서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특히 거래명세서 등에 원산지 정보를 표기하여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수산물 음식점의 거래관행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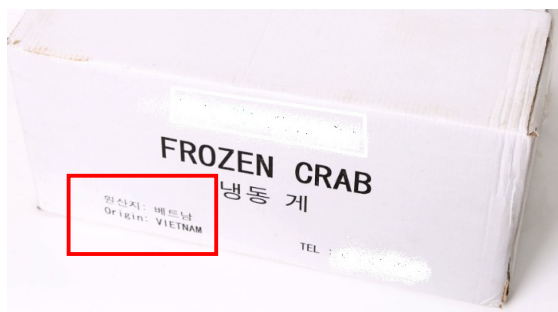
첫째, 대부분 수산물 음식점 등 운영자는 매입 시 거래명세서를 수취하는 대신 장부에 기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를 합산하여 일괄 정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음식점에서 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정된 공급업자로부터 주기적으로 수산물을 공급 받는다. 이 경우, 장기적인 거래관행 속에 매 건별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수취하는 행위를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자 간의 거래 사실만을 확인하기 위한 장부를 두고, 여기에 공급일자과 품목, 수량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부거래는 수기로 이루어지며, 공급업자가 매입업자의 장부에 서명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원산지 표시를 표기한 장부는 원산지 표시의 증빙으로서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장부에는 원산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산물 매입 시 박스 등 현품에 표기된 원산지 표시를 음식점 등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해당 박스 등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 또는 박스 자체가 분실, 훼손될 우려가 높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가 표기된 박스는 잘 관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음식점 등 운영자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므로 가능한 한 폐기하려고 하며, 내용물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보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다수다. 거래명세서 등에는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거래일자를 포함하므로 해당 원산지 물품의 유통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나, 박스 등 실물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로 증빙을 하고자 한다면, 공급자 또는 거래처 등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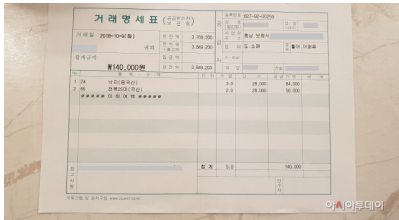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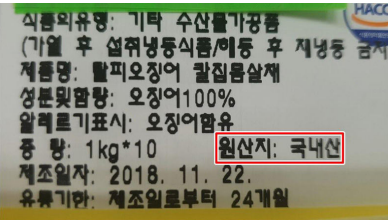
〈그림 4-2〉 박스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



자료: 구리도매시장 쇼핑몰(검색일 : 2019.9.29.)

위와 같은 일반적인 수산물 음식점 등의 운영자에게는 매입한 수산물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한다는 행위가 번거롭고 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음식점은 대부분 영업장소가 협소하고 가능한 한 재고를 두려 하지 않으므로 공간의 확보가 쉽지 않다. 또한 음식물을 제조, 가공하므로 습기가 많아 종이서류인 경우에는 관리가 쉽지 않고 훼손될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림 4-3〉 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거래명세서 등 거래증빙자료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
	

자료: SBS 뉴스(2018. 12. 4), 「중국산 오징어 22t 국산 둔갑…짬뽕 재료로 유통」; 아시아투데이(2018. 11. 12),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6곳 적발」

현재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 보관기간인 6개월이 실제 수산물 유통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의무보관이 시행된다면, 음식점 등 운영자는 최대 6개월 이전까지의 거래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보관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리비용의 상승, 보관장소의 협소 그리고 분실 및 훼손 위험에도 관리가 필요하므로 장기간 보관에 부정적인 의견이다. 특히 횃집 등 활어를 취급하는 경우, 수산물 입고 후 일반적으로 수일 이내에 판매되므로, 음식점 등 운영자는 원산지 거래증빙자료의 보관의무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산지가 표기된 거래명세서의 발급뿐만 아니라, 거래명세서 등의 수취 및 보관만으로도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 거래명세서의 보관은 기존에 관리하지 않았던 업무에 대한 추가비용을 의미하며, 영업상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매입한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자신이 매출 또는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근거로 사용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한, 거래명세서 등의 수취 및 보관은 매우 번거롭고 불필요한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3) 유통판매자

(1) 수산물 소비자 신뢰도 상승에 긍정적 효과 기대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증빙으로서 거래명세서 등의 의무발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수입 및 국내 유통업체 당사자는 동 조치가 최종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앞당기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거래 시 해당 품목과 함께 원산지 정보를 거래하는 것은 상 관행상 당연한 조치이며,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궁극적으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바다.

이러한 의견을 표명한 업체들의 특징은 현재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수입유통이력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고시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원산지 표시와 유통에 따른 이력관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증빙서류의 발급 및 유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다른 특징은 ERP³⁵⁾와 같은 전산처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원산지 관리를 위한 별도의 인적자원 투입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ERP를 사용하나, 중견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별도의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산물의 입출고를 전산으로 관리한다. 전산상 품명과 함께 원산지 정보를 기입하면 출고 시 거래명세서 등에 자동적으로 원산지 정보가 표기되므로 거래증명서 의무도입으로 인한 별도의 생산단가 인상이 발생할 여지는 적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2) 유통판매업체의 가격경쟁력 저하 원인

원산지를 표기한 거래증빙자료 의무도입에 반대하는 업체들은 동 규제조치가 기업들의 인건비 증가를 유발시키고 생산단가 증가를 초래하여, 결국 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유통되는 상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기하는 일에 더하여, 거래명세서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추가 인력의 투입이 요구되는 규제조치라고 인식한다. 하나의 품목이라 하더라도 원산지별로 구분 및 관리해야 하므로 그만큼 재고번호의 개수가 증가하며, 이를 관리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직원)이므로 인원당 해야 할 업무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일수록 1인당 처리업무의 종류가 많고, 이것이 누적되면 추가적인 인원의 고용이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거래명세서 등의 의무발급이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부정적인 효과로서 서류관리 비용의 상승이 지적된다. 원산지가 표기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은, 곧 동 서류를 일정기간 동

35)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안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 단속 등으로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간(현행 6개월) 동안은 해당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을 통하여 재고를 관리하는 기업 이외에 종이서류를 비치·보관하는 기업은 박스 등에 거래명세서를 담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 영세한 규모의 수산물유통업체가 다수인 현실을 고려하면, 전산시스템 미비 및 협소한 사무공간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증빙자료 발급 및 보관의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나타낸 업체들은 수입산뿐만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도 같이 취급하고 있었다. 고등어, 낙지 등 수입산과 국내산 모두 취급하는 업체들은 수입산에 대해서는 거래증빙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나, 국내산에 대한 거래증빙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산물 재래시장과 같이 품종과 원산지가 다양하고, 규모가 영세한 유통단계 당사자들은 간이영수증을 주로 사용하는데, 원산지 표시와 같은 행위에 대해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행위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거래명세서 등 발급에 부정적인 업체에는 주로 현금거래를 당연시하는 당사자들이 있어, 거래명세서 등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과세표준 축소를 위하여 현금거래 후 소득 미신고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기도 하지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발급 및 수취도 불가능 하므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수산업계 종사자들은 농업인에 대한 과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에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4) 정책당국

(1) 원산지 표시 단속 효율성 증가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 보관의무의 도입은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원산지 표시 단속 수행자는 음식점 등 방문 시 원산지 표시 유무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러한 원산지 표시의 진위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부재하여, 원산지 표시가 거짓표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2차적인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³⁶⁾ 그러나 원산지 표시를 입증하는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한다면,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입증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거래증빙자료의 부재로 원산지 표시 단속반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은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가 의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거짓 원산지 표시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거래명세서 등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되면, 음식점 등의 운영자에게 다소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므로 단속자와의 불필요한 언쟁 등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품목 수가 다수인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거래증빙자료의 의무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수는 총 열두 가지이며, 살아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모두 원

36) 담당자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스러워도 이를 증명하는 비율은 10% 이내이다.

산지 표시대상이다. 반면 농축산물의 경우 총 여덟 가지로 품목 수가 적으며, 이 또한 축산물은 대부분 이력추적관리제로 인하여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품목 수가 많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효율성이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의 보관의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2) 의무발급 대체방안 발굴 필요

거래증빙자료 의무도입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는 동 조치가 단속자의 입장을 고려한 규제조치이며, 다른 대체 확인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먼저, 현재 원산지 표시제도에서 각 음식점 등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조치를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거래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중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음식점 등 운영자의 표시행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보관하게끔 하는 의무라는 것이다. 음식점 등의 운영자에 대한 대면질의를 통한 확인만으로, 원산지의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거래증빙자료의 보관이 아니더라도 원산지 표시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대체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수입 농수산물인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입유통이력제’를 통하여 원산지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국내물품인 경우 ‘이력추적관리제도’를 통하여 거짓원산지 표시인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입유통이력제’는 관세법상 수입통관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해당 원산지를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 유통 단계까지 관리하므로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

업무는 현재까지 관세청 및 각 관할 세관에서 집행하고 있으나, 수산물의 경우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로 이관받아 원산지 표시와 함께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 12개 품목 중, 수입유통이력신고에 해당되는 품목이 3개로서, 원산지 표시업무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추가적으로 최근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³⁷⁾에서 영업자 스스로 거래증빙자료를 보관할 유인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무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개정 전까지 음식점 등의 운영자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³⁸⁾

〈표 4-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사.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 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한다.	----- ----- ----- ----- ----- 다만,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자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367호, 2019.9.10.)

3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냉장고 등 보관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원산지 표시의무가 지금까지 영업자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의무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유사한 규제의 완화조치를 통하여 거래명세서 등을 자발적으로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는 유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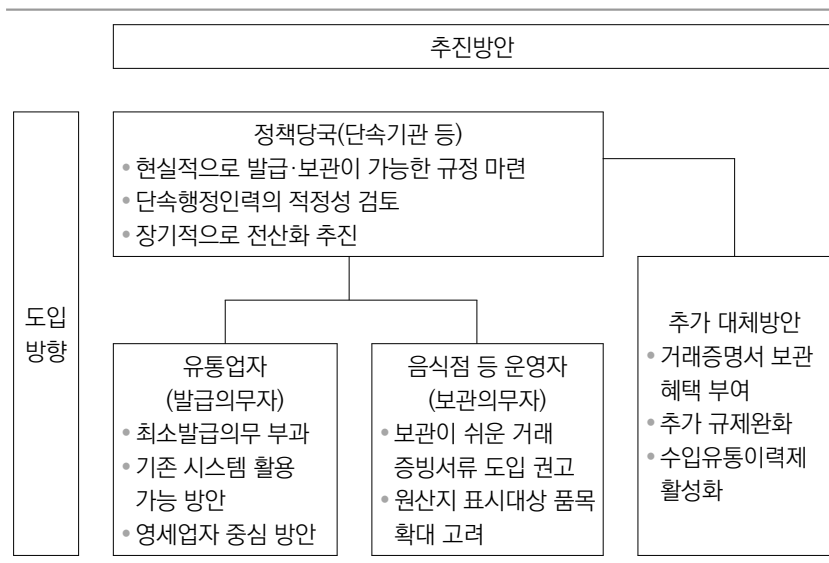
제2절 수산물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의무 도입방안

1. 도입방향

원산지 표시를 입증하는 거래증빙자료의 의무보관제도는 음식점에 표시된 원산지를 입증하는 증빙을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원산지 거짓 표시를 단속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원은 메뉴판에 적혀 있는 원산지가 허위표시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일이 영업자를 조사하거나 추가서류를 요구할 필요 없이, 즉시 현장에서 거래증빙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증빙자료의 발급·보관의무 도입은 정책당국의 원산지 거짓 표시 단속을 효율화할 수 있으나, 동시에 수입·유통업자 및 음식점 등 운영자에 대한 추가의무 부담으로 인식되어, 이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뿐 만 아니라, 거래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 업무도 추가되어 원산지 표시 단속반의 업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거래증빙자료의 의무도입과 동시에 이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4-4〉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 보관의무 도입방향



수입·유통업자는 원산지 거래증빙자료의 발급 의무자로서 발급에 따른 추가의무를 최소화하기를 원한다. 이에 가능한 한 기존 발급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규정을 도입하고, 이러한 조치는 가능한 한 적응이 쉬운 대규모, 기업형 유통업자보다는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조치가 되어야 한다.

음식점 등 운영자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이행률이 가장 저조한 대상으로서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음식점과 노점상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법령 변화에 상대적으로 적응이 쉽지 않은 점이 존재한다. 보관의무가 도입되더라도 보관이 쉬운 거래증빙서류를 대상으로 하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래수단에 원산지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해당 서류

의 보관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또한 보관이 필요한 수산물 품목도 적절한 수준인지 재검토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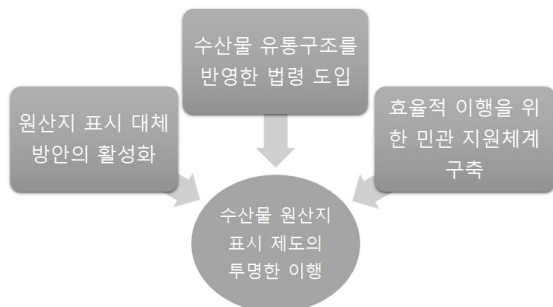
정책당국은 발급·보관의무가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추진이 현재 수산물 유통구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산물 유통구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다른 법령의 조항만을 가져오게 되면 의도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법 집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 규제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수입유통이력제도를 활성화하여, 원산지 표시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발급 의무자와 보관의무자가 두 가지 의무를 한꺼번에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이와 같은 도입방향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추진방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투명한 이행을 위한 거래증빙자료 비치·보관의무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수산물 유통구조를 반영한 거래증빙자료 발급·보관의무를 도입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유통판매업자들의 영업의 종류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수산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래증빙자료가 의무적으로 발급·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수산물 유통단계 중 증빙자료의 발급의무를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농축산물에 비하여 다양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4-5〉 거래증빙자료 비치·보관의무 도입 추진방안



다음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대체방안의 활성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산지 표시제도는 이력제도와 유사한 목적이 있으며, 이력제의 활성화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수입이력관리제도가 조만간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는 만큼, 이력제의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이행을 위한 민·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민간 부문에는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 보관이 용이하도록 전산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산화 지원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속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만 비용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 부문에서는 증가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단속행정인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1) 수산물 유통구조를 고려한 거래증빙자료 발급·보관의무 도입

음식점 등 운영자가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전 단계의 유통판매업자가 원산지가 표시된 거래명세서 등을 원활히

발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거래되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잘 알고 있는 당사자는 유통판매업자이며,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기재된 거래명세서가 성실히 발급될 때 음식점 등 운영자는 이를 보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거래명세서 등의 발급 의무를 법령에 도입하는 것은 유통판매업자를 명확히 규명하고 영업의 범위를 정의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면에서, 축산물의 경우 유통판매단계의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정의 및 범위가 명확하여 거래 명세서 등의 발급의무를 구체적으로 의무화 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 명세서 등의 발급의무가 존재하는 영업자의 대상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음식점 등 운영자에게 원산지가 표시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업자 등에게 이력번호를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축산물 관련 법에서 거래명세서 등의 발급의무를 구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각 영업자의 분류 및 정의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는 축산업 관련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는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축산물 관련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수산물의 경우 유통단계별 당사자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수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수산물유통사업자, 산지중도매인, 산지매매참가인 등에 대한 정의 조항이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2장 수산물 유통구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수산물 유통단계에는 산지중도매인, 산지매매참가인 이외에도 다양한 단계의 유통당사자가 위치해 있어, 수산물 관련 영업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다.

〈표 4-3〉 식육판매업 영업의 종류와 범위

-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营业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슈퍼마켓등 점포 경영자"라 한다) 또는 식육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닭·오리의 식육(제12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같다)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만든 포장육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 4)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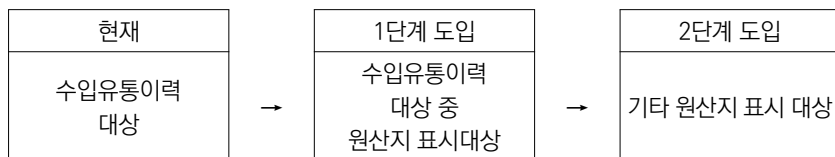
수산물의 거래 명세서의 발급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산물 유통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수산물 유통 단계에 포함된 다양한 당사자들의 정의와 영업의 종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발급의무를 부과할 때 문제가 없을 것이다. 특히, 수산물의 유통구조는 축산물과는 달리 여러 단계에 걸쳐 있고, 또 유통단계가 복잡하여 축산물과 같이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영업의 행태가 명확한 수산물 유통당사자부터 명확히 범위를 설정하고 거래 명세서 등의 발급의무를 부과한 후, 기타 당사자들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아가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2) 거래증빙자료 보관대상 수산물의 단계적 적용 및 확대

수산물 거래증빙자료의 발급과 보관의무 도입시, 농축산물에 비하여 많은 종류의 원산지 표시대상이 있다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음식점 등의 운영자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농축산물이 8개 인데 비해, 수산물은 12개이며 2020년 4월부터는 3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15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특히, 특정 1~2개 품목을 주로 판매하는 농축산 음식점과는 달리, 수산물 음식점은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곳이 많아, 모든 수산물에 동시에 거래 증빙자료 보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발급 및 보관과 관련한 관리비용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중, 단계별로 거래증빙자료의 보관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무도입 초기에는 거래 명세서의 발급이 원활한 수산물을 선정하여 발급과 보관의무를 두게 한다면, 유통판매업자와 음식점 등 운영자는 거래 명세서의 보관 및 단속에 대한 대응이 용이할 것이다.

〈표 4-4〉 거래증빙자료 의무발급·보관대상



자료: 저자 작성

도입 초기에는 우선 현재 「관세법」 및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수입 유통이력 대상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 보관의무를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유통이력관리대상과 원산지 표시대상 중에는 일치하는 수산물이 존재한다(예: 뱀장어, 미꾸라지, 참돔). 먼저 이들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거래 증빙자료 발급과 보관을 의무화한다면, 유통판매업자는 현재 관련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별도의 비용이나 행정적 부담 없이 거래명세서 등 발급 의무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일정기간 간격으로 거래 증빙자료의 보관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3) 원산지 표시 대체방안 활성화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원활한 이행은 거래증빙자료의 수취와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인식 조사 결과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거래증빙자료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물 이력관리제 양쪽에 원산지 표시 근거를 두고 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중, 의무적으로 이력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은 현재 소, 돼지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닭, 오리가 추가되어, 현재 음식점 등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축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은 이력관리대상과 상당부분 일치하게 된다. 이력관리번호에는 원산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이력관리번호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원산지 표시증빙이 가능하다.

〈표 4-5〉 축산물 관련 법령상 관리대상

축산물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소, 돼지, 닭, 오리의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수산물의 경우에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이력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수산물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축산물과 같은 원산지 표시 확인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시범적으로 굴과 조기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당장 이력제를 원산지 표시의 증빙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관세법」에 따라 수입수산물에 한하여 적용되는 이력관리제는 현재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수산물은 수입통관 및 국내 반입 후에도 원산지 표시를 적절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그 이행이 강제적이다. 비록 수입물품 유통이력 수산물이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과 일치하지 않는 품목이 존재하고,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력추적이 불가능하나, 수입유통이력 수산물은 시기별로 대상을 조정 관리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 대상과 일치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수입수산물에 이중으로 적용되는 두 개의 법률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시부터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품목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을 일치시켜 법 적용을 원활하게 하고 영업자에게 이중적인 법 집행을 강제하지 않아도 된다. 향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면 관세법 적용 품목들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이력관리에 있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³⁹⁾

4)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 전산화 지원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인 거래명세서 등이 종이서류인 경우, 우선 해당 서류가 적절한 장소에 비치·보관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정 품목의 거래사실 및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동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효율적인 단속 시스템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거래증빙자료가 전산화되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전산 시스템상의 거래증빙자료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 보관되므로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쉬우며,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품목의 특정 일자 거래내역을 단시간에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해당 시스템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시스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하여 원산지를 속이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허위원산지 가능성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전산화 지원이 어려운 재래시장 등에는 ‘원산지 발행기’와 같은 자동 원산지 표시발급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재

39) 수산물 수입유통이력제 업무를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 예정(2020년 하반기)

래시장에서는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영수증에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경우 사실상 기재를 추가 요청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러나 수산물의 특성상 무게측정을 위한 저울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물품의 무게와 품명, 가격 그리고 원산지 표시까지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원산지 발행기’의 발행 내역은 관리를 통하여 추후 원산지 표시 단속 시 거래증빙자료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6〉 수산물 거래 시 사용되는 저울



자료: 지마켓(검색일: 2019.11.3.)

장기적으로는 전산 시스템상의 원산지 정보를 원산지 표시단속반에 온라인으로 송부하여 원거리에서 원산지 표시단속을 할 수 있다. 종이서류와 달리 시스템상의 정보는 가공 편집이 용이하므로 업체의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품목과 원산지, 거래일자 등 공개 시에도 문제가 없는 정보만을 선별하여 단속반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원산지 표시위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전산 시스템 구축은 일반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불해야 가능해, 자금이 부족한 소기업 또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AS 비용, 업데이트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고령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 자체가 어려워 시스템을 구축하여도 활용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후 가능한 한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5) 원산지 표시 업무증가에 따른 단속행정인력 보강

거래증빙자료 보관의무가 도입되게 되면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과 더불어 해당 원산지의 근거가 되는 거래 증빙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 중, 음식점 등 운영자가 보관대상 서류를 적절히 보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서류에 필요사항(거래일자, 공급자명, 품명 및 원산지 등) 정보가 적절히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보관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가 해당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한 증빙인지 여부도 함께 조사 및 단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관의무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에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인원 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담당 인력의 보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의 담당자에 따르면, 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장소는 약 70만개로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대비 약 83.8%수준이다. 그러나 수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인원은 131명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1,110명의 11.8%에 불과하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정원에 비하여 조사장소가 상대적으로 많아, 인원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6〉 농산물,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음식점 수 및 단속인원

구분	농산물품질관리원(명)	수산물품질관리원(명)	비중(%)
음식점수	837,295	701,708	83.8
단속인원	1,110	131	11.8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 인터뷰(일시: 2019.9.25.~26.)

또한 해양수산부는 향후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 속에 원산지 표시 단속 비율을 증가시킬 예정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 확인과 같은 추가업무 까지 가중된다면, 원산지 표시 단속인원 1명이 단속할 수 있는 업소 수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업무에 비하여 부족한 인원현황과 향후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 업무 증가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인원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투명한 이행을 위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앞서 총 4개의 장을 통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현황과 문제점, 관련 업계에 대한 인식조사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제1장은 증가하고 있는 외식과 농수산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등 원산지 표시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의 배경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효율화를 위하여 거래증빙자료 발급·보관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도입방안 등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원산지 표시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소비자 후생과 관련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점 등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제2장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법체계와의 비교를 위하여 외국 관련 법 제도 및 국제분쟁 사례를 조사하였다. 원산지 표시가 가지는 특징으로서 비특혜 원산지 제도 중 하나인 원산지 표시는 통일된 국제법 또는 국제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외무역법」, 「관세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원산지와 관련된 법령이 다수 존재하는데, 특히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본 연구의 대상인 유통판매자와 음식점 등 운영자의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과 이와 관련된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원산지 표시 의무제도의 도입이 아닌, 원산지 표시를 증빙하기 위한 거래증빙자료 발급·보관의무의 도입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거래증빙자료와 관련한 수산업계의 의무사항이 정비되어 있는지 검토하였다. 축산물의 경우,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2000년대부터 거래명세서의 발급 및 보관의무와 함께 이력추적관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원산지 표시의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반면, 농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의무는 도입되어 있으나 거래증빙자료와 관련한 의무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관세법」과 관련 고시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수입 농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포함한 이력관리가 수행되고 있을 뿐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증빙을 위해서는 수입수산물뿐만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도 증빙이 가능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된 의무조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과 일본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으며, EU에서는 일부 회원국에 한하여 의무화

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일본의 경우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의 보관을 권고하고 있으며, EU에서도 각 회원국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국제분쟁 사례인 미국의 US-COOL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원산지 표시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의 확보도 중요하나, 수입물품을 내국물품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국민대우 조항과,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이 불필요하게 무역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WTO의 판결을 유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장은 우리나라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히 검증하는 단속기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횟수와 업소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유통업체와 음식점 등 단속대상의 위반 현황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인 원산지 표시의 이행률과 표시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8년에는 각각 91.1%, 98.2%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법령 분석과 운영 현황을 토대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는데, 크게 원산지 거래증빙자료를 발급·보관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부재, 활성화되지 못한 수산물 이력제, 영세유통업체의 낮은 원산지 표시 이행률이 그것이다. 첫째,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거래명세서 등 보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나, 수산물과 관련한 법령에서는 거래명세서 등의 발급의무를 명시화한 법령이 없어, 이행 확보수단이 부재한 상태다. 둘째, 수산물 이력제는 원산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의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 낮은 이력제 참여율로 원산지 표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음식점과 노점상 등은 수산물 업계에서 원산지 표시 이행률이 가장 낮은 곳으로, 유통단계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음식점과 노점상은 현금거래를 선호하며 거래가 불투명하여 거래명세서 등의 발급이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 발급·보관의무 도입에 선행하여 수산물 업계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거래증빙자료의 발급·보관의무 도입과 관련한 인식조사는 음식점 등 운영자, 유통판매자, 그리고 정책당국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전화설문 및 면접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각 그룹별로 의무도입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의견을 조사하였다. 음식점 등 운영자는 유통판매업자의 거래명세서 발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의무도입은 필연적으로 관리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영업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거래명세서 발급의무에 대해 유통판매자들은 법 제도의 도입이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발급을 위한 인적, 물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정책당국을 포함하는 정책당국은 효율적 단속을 위해서 반드시 의무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의무도입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체방안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위한 추진방안으로서 수산물 유통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우선적 법령 개정의 필요성, 원산지 표시 대체방

안의 활성화, 민·관 지원체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통구조가 불투명한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급의무 대상 규명을 위한 영업의 종류 및 범위 설정이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거래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부과하는 품목을 단계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산지 표시 대체방안은 향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산물 이력제의 활성화가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이행을 위한 민·관 지원체제 구축에 있어서 재래시장 등 자본이 부족한 유통단계에 전산 시스템 등 도입을 통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인력의 보강으로 신속한 단속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정책 시사점

1) 거래증빙자료 발급 의무 도입을 위한 품목별 타당성 검증 필요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2019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60.8kg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8년 60kg보다 약 1kg 증가한 수치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pp. 25).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산 수산물의 소비가 지목되고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베트남, 노르웨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산물 수입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산물 수입 증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수산물 선택폭의 확대와 수입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 효과를 누릴 수 있겠으나, 이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다. 수산물 수입부터 통관, 가공, 유통, 그리고 최종판매에 이르기까지 원산지 표시가 제대

로 이루어져야 최종 소비자는 원산지를 확인 후 원하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동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대응방안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속히 정착됨과 동시에,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또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거래증빙자료 발급 의무 도입을 위한 후속 단계로서 '수산물 품목별 도입 타당성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품목별로 유통과정 및 유통판매자가 다양하여 수산물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을 일시 도입하는 것은 여러 이행상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먼저, 앞서 제시한 1단계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 의무보관 대상 품목에 대한 도입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여 단계별로 거래증빙자료 발급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입 타당성 연구는 크게 ① 수산물 유통구조의 확인, ② 의무부과 대상의 특정, ③ 의견수렴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수산물에 대한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분석하여 품목별 유통과정과 각 유통단계별 주요 거래당사자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유통구조의 확인은 품종별로 분석하여 유통구조가 각 품종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유통과정에 나타난 거래 당사자 중 실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의 발급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향후 관련 법령에 그 영업의 범위와 종류가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 바, 구체적이고 수산업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설문조사 및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해당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의무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발급 의무의 부과는 유통판매자를 규제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법령 도입

이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의무 부과가 가져올 긍정 및 부정적 효과를 함께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 발급 의무 도입이 어떤 법령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수산물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이 존재하나, 거래 증빙자료 의무도입은 수산물 유통의 투명화를 위한 성격이 크므로 「수산물 유통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동 법령에 산지중도매인, 산지매매참가인 등 포괄적으로 정의된 수산물 유통당사자를 보다 구체화하고, 각 당사자에 대한 영업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보관의무 부과시 의무이행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국내산 수산물 위생·품질 향상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소비자는 선호하는 원산지 상품을 소비하려고 할 것이다. 아직까지 국민들의 인식은 ‘수입산’보다는 ‘국내산’이 신선하고 맛도 좋다는 것이 일반적이나, 향후에도 이러한 인식이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수산물의 위생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쉽게 해결될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특히 수산물 생산부터 유통 후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생이 일정하게 관리되지 못하다 보니, 질병의 발생이나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김성만(2014, pp. 105.)은 우리나라 수산물 산지 및 소비지의 유통시설에서 위생관리가 미비하며,

저온저장시설을 갖추지 못해 수산물의 선도를 저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대영(2019, pp. 818.)은 우리나라 수산물 품질·위생 관리의 한계점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산지위판장에서 수산물을 바닥에 쏟고 위판하는 관행 등 최소한의 위생관리가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언론에서도 수산물 위생문제로 발생하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면 국민들의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인식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단기간에 회복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이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수산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건강에도 좋다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수산물 위생 및 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향상된다면, 증가하는 수산물 소비량에 따라 국산 수산물 소비도 확대될 것이다.

3) 국제법 준수를 위한 노력

원산지 표시제도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포함되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이 개별 국가들의 국내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국제 무역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WTO TBT 협정에서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한 국가가 WTO TBT 협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 규정을 도입한다면, 이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무역으로 제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문에서 살펴본 미국의 US-COOL 분쟁 사례는 주변국과의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결정된 대표적인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다.

우리나라 역시 WTO 회원국이므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제법과의 정합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도입한 원산지 규정이 보호무역 관행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면, 오히려 외국으로부터 불공정한 국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WTO뿐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가 타결한 RCEP와 가입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CPTPP 등 자유무역협정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FTA에서는 원산지 표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상대국에 통보하고 적합한지 검토해야 하며, 발효 전까지 관련 업계가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등 다양한 요건을 두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고 있는 상대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이 국내에서 원활히 작동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타당성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종호·김대영, 「수산물 유통 관련법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2013.
- 고민영, 「육류상품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조치를 둘러싼 국제 통상법적 쟁점」, 『국제경제법연구』, 10(2), 2012.
- 관계부처 합동,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2013.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18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2018.
-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 관리사 원산지결정기준」, 2018.
- 김대영, 「일본의 수산물 품질위생관리 실태와 정책적 함의」, 『수산해양교육연구』, 31(3), 2019.
- 김민아,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 관련 식품표시기준 일부개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9월』, 2017.
- 김성만, 「수산물 위생 및 물류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어상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13(4), 2014.
- 농림수산식품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성과분석 및 중장기적인 대상품목 확대방안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2012.
- 농림축산식품부, 「WTO SPS 분쟁사례 자료」, 2013.
- _____,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9.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차년도(2017) 주요결과」, 2017, pp. 7.
- 식품안전정보원, 「일본 식품표시법 및 표시기준」, 『식품안전정책 비교 보고서』, 2015-07, 2015.
- 전익수, 「원산지 표시제 안전한가? 미국 육류 무역분쟁사례」, 『시선집중 GSnJ』, 223, 2016.

- 정재완, 「원산지 표시 위반 수입물품의 시증유통 근절방안」, 『관세학회지』, 11(2), 2010.
- 정재호·김미영·홍현표,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세연구』, 15-01, 2015.
- 조성주·오새라·박수연, 「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로 본 주요국의 농업부문 무역장벽 현황과 시사점」, 『현안분석』, 2019.
- 주문배, 「미국 식품이력추적제도의 특징과 정책동향」,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월간수산동향 8월호』, 2011.
- 최임수, 「원산지 표시위반 효과적 억제방안 연구」, 『조세연구』, 11(2), 2011.
-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2019 해양수산물 전망대회」, 2019.
- 해양수산물부,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2018.
- _____, 「굴비·생굴 유통과정 한 눈에...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첫걸음」, 보도자료, 2018.10.24.
- _____,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보도참고자료, 2019. 5. 1.
- _____,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 해양수산물부 내부자료, 2019.
- 황화중, 「원산지 표시 위반 벌칙의 합리적 조화방안 연구」, 『관세학회지』, 19(2), 2018.

〈국외 문헌〉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Mandatory origin-labelling schemes in Member States”, BRIEFING, 2018.
- WTO, “Korea-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Report of the Panel, WT/DS495/R”, 22 February 2018
- WTO, “Korea-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495/AB/R”, 11 April 2019

外食・中食産業等食品表示適正化推進協議会, 「外食・中食における原料原産地 情報提供ガイドラインQ & A」, 2019.

消費者庁, 「知っておきたい食品の表示」, 2018.

〈인터넷 자료〉

구리도매시장쇼핑몰, http://gurimarket.co.kr/shop/item.php?it_id=1489128221(검색일: 2019.9.2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단속절차, <https://www.nfqs.go.kr/2013/contents.asp?m=4&s=63&s2=1>(검색일: 2019. 11. 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 <http://www.mafra.go.kr/mafra/1373/subview.do>(검색일: 2019. 10. 29).

농업교육포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바로알기, https://www.agriedu.net/page/client_study_ing#appPage_study_status_ing_online(검색일: 2019. 10.5.)

지마켓, http://item.gmarket.co.kr/Item?goodscode=869355549&pos_shop_cd=SH&pos_class_cd=111111111&pos_class_kind=T&search_keyword=(검색일: 2019.1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라벨링 규정 변경, <http://www.krei.re.kr/wldagr/selectBbsNttView.do?key=162&bbsNo=66&nttNo=45277&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wd=&pageIndex=1&integrDeptCode>(검색일: 2019. 10. 19).

ASPA WHITE PAPER, Restaurant 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 is Necessary to Prevent Health Risks, https://americanshrimp.com/aspa-white-paper-restaurant-country-of-origin-labeling-cool-is-necessary-to-prevent-health-risks/#.Xb_fAZoZaUk(검색일: 2019. 9. 20).

핀란드 식품 안전청(Finnish Food Authority), The country of origin of meat must be displayed in writing in restaurants from the beginning of May 2019, <https://>

www.ruokavirasto.fi/en/companies/food-sector/uutiset/the-country-of-origin-of-meat-must-be-displayed-in-writing-in-restaurants-from-the-beginning-of-may-2019/(검색일: 2019. 11. 1).

미국 농무부(USDA), <https://www.ams.usda.gov/rules-regulations/cool/questions-answers-consumers>(검색일: 2019. 10. 21).

〈법령〉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14호)

「관세법」(법률 제16093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7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1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87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61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6277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8호)

「대외무역법」(법률 제16422호)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05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42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153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352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3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제1643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1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48호)

「해양수산물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물부령 제364호),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Finnish Ministry of Justice, Decre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mending the Decre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on the
provision of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Government of Ireland, S.I. No. 307/2006 - Health (Country of Origin of Beef)
Regulations 2006」

「Customs Cooperation Council, Kyoto Convention, 1973, Annex D1 concerning
rules of origin, Definition (a)」

「European Communities, Directive 2000/13/EC」

「European Communities, Regulation(EC) No. 1760/2000, Beef Labeling regulation」

「European Communities, Regulation(EC) No. 178/2002, General Food Law
Regulation」

「European Union,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337/2013」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No. 1169/2011」

「The Official Journal of the French Republic, Decree No. 2002-1465 of 17
December 2002 on the labeling of beef and veal in catering
establishments」

「United States of America,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

「United States of America,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World Trade Organizati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

「 World Trade Organization, DS495: Korea — 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日本, 食品表示基準 内閣府令 本則・附則」

부록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대비 해양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최지현
02	수산부문 전망모형 「KMI-FOSiM」 구축 연구(2차년도)	이현동
0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어촌 구축방안 연구	박상우
04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구축 연구	최석우
05	연안토지의 공공적 관리 강화를 통한 연안관리 효과 제고방안	윤성순
06	선박 배출저감기술의 국내 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안용성
07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최일선
08	주요국의 해양유전자원 관리체계 강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박수진
09	하천·해양 수질의 연계·통합 관리 체계 연구	장원근
10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이정삼
11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 및 보존에 관한 연구	류정곤
12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사회적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정명화
13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노동정책 영향분석 연구	한광석
14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개선 방안 연구	김태일
15	국내외 해운금융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금융 역량강화 방안 연구	전형진
16	해상 사이버 보안 대책방안 연구	박한선
17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해운기업 역량강화방안 연구	윤희성
18	국내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산항 및 주요항만을 중심으로	하태영
19	동북아 공동배출규제해역 지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연구	이기열
20	수출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협력 수준 분석과 물류정책 개선방안 연구	김은수
21	온도조절 컨테이너의 국제물류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신수용
22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3/3)	박한선
23	환경해권 경제개발 및 협력방안 연구(3/5)	최나영환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	------------------------------	-----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부문 전망모형 「KMI-FOSiM」 구축 연구(1/2)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여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양식여장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해양사고조사체계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연구 - 베이지안 방법론을 중심으로	고병욱
12	해운기업 지배구조 및 비즈니스 유형과 경영성과 관계 분석	황진희
13	건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이연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나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함수 추정과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환동해권 국내기업 진출사례 분석 및 개발 추진전략 - 극동 러시아 지역 사례 중심으로 -	이기열
18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지속발전방안 연구 -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차년도) -	박한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일본의 수산물 수입 구조 분석과 對일본 수출 전략 연구	임경희
02	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장홍석
03	사업체 총조사 MD를 활용한 2016, 2017 어촌지역 고용통계	한광석
04	외래 해양부착생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박수진

2018년

01	선화주조선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낙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3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안용성
04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 개선을 통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 방안	조지성
05	최저임금 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6	수산업·어촌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류정곤
07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연구 방안	엄선희
08	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박수진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최일선
02	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방안	이남수
03	해수욕장의 사회약자 포용성 증진 방안	정지호
04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황규환
05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연계·활용방안 연구	안용성
06	한국산 수산물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한기욱
07	해양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력 방안 구상	이윤정
08	USMCA 수산분야 협정문 분석 및 시사점	안지은
09	해운 조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	안영균
10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박상우
11	지역 해양수산 역량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황재희
12	극동러 진출 우리 화주·물류 기업의 물류 애로사항 분석 및 개선 방안	박성준

2018년

01	미안마 국립수산대학 설립 추진 방안	정명화
----	---------------------	-----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 ASC 인증을 중심으로 -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 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17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용
18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병욱
19	신남방정책 이행 위한 우리나라 - 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명화
20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최지연
21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최지연
22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문석란
23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연구	박상우
24	페루 수산업 실태 및 수산 협력 방향	엄선희
25	경제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이용한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	한광석
26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남정호
27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도입방안	홍장원
28	어촌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박상우
29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만 및 배후단지 활용방안 연구	이종필
30	IMO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대비한 국내 해운산업 대응 전략	이호춘
31	외래병해충에 대한 항만분야 방제체계 개선방안	최나영환
32	수산물 생산·유통분야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가능성과 도입방안	고동훈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양식수산물의 경영비 조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백은영
02	딥러닝 기반의 건화물선 시황예측 연구	윤희성
03	해운-조선산업 관계분석 연구 - 컨테이너 신조발주량 예측 -	최건우
04	디지털 공급사슬 물류정보통합 구축전략 연구(Ⅰ) - 디지털 공급사슬 생태계 정보통합지도 구축 중심 -	최상희

2018년

01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김근섭
02	2019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03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참여 방안 연구	김민수
04	물류기술 R&D 추진성과 분석 연구	강무홍
05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일로 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김형근
06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7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연구	김민수
08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 방안	이상철
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	황진희
10	영토 권원 이론의 현대적 발전과 한계	김원희
11	동해표기 문제 연구	현대송
12	우리나라 기업의 창장물류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13	태국의 수산물 소비트렌드 분석 및 수출 전략연구	임경희
14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제도 개선 연구	육근형
15	해양수산 분야 9브릿지 구축방안 연구	박성준
16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박상우

수산물 원산지 거래증빙자료의
비치·보관의무 도입방안 연구

인 쇄 | 2019년 11월 28일 인쇄

발 행 | 2019년 11월 30일 발행

발 행 인 | 장 영 태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6,000원